공명선거지원단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

공명선거지원단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

(2020. 1. 2. ~ 2020. 4. 15)

YouTube 세뇌탈출

자유시민본부 서울서북연대

목 차

1. 서 문 ····· 7

2. 캠페인의 목적 ····· 11

3. 활동 전개 ····· 15

가. 활동 전개 (전반) ····· 15
나. 전략 수정 ····· 21
다. 활동 전개 (후반) ····· 21

1) 선관위 개표참관인 신청 ····· 21
2) 사전투표 정당투표참관인, 정당개표참관인 신청 ····· 21
3) 선거일투표 정당투표참관인, 정당개표참관인 참여 ····· 22
4) 선관위 외부 감시활동조 편성 ····· 23
5) 서북연대 카톡창을 통한 총선 감시활동 오리엔테이션 ····· 24
6) 1인 시위 ····· 26
7) 선거 전 홍보 ····· 26
8) 선관위 방문 활동 ····· 26
9) 공식 선거 기간 ····· 27
10) 샌드위치 패널 스티커 교체. ····· 27
11) 투·개표감시인 활동 ····· 28
12) 투표함 봉인, 이송, 봉인유지 감시·확인. ····· 29
13) 마지막 광화문 야외미팅 ····· 29

라. 선관위 방문 결과 보고 ····· 30

1) 방문 일정: ····· 30
2) 각 선관위 주요 질의, 참관 내용 ····· 30

4. 논의와 학습 ····· 37

가. 사전투표 제도 ····· 37
나. 재외국민투표 ····· 40
다. 개표장 레이아웃 ····· 44
라. 통합명부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 ····· 58
마. QR코드 문제 ····· 59

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인계시의 각 감시인들의 역할 ····· 61
사. 투표용지 인쇄, 날인 문제 ····· 62
아. CCTV 설치, 투표함이 아닌 행낭 사용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63
자. 투표시스템, 통신과 프로그램 문제: 행안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사용 ····· 63
차. 투표참관: 정당투표참관인 ····· 63
카. 개표참관 ····· 66
1) 개표참관인: 선관위 개표참관인, 정당 개표참관인 ····· 66
2) 일반 개표관람 ····· 67
타. 투표소에서의 투표자 촬영과 참관인 촬영 ····· 67
파. 활동 중 발생한 이상상황 ····· 68
1) 사전투표함 이송은 안전한가? ····· 68
2) 선관위가 보관하지 않는 부재자 투표함이 있나? ····· 70
3) 선거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직원 행동 매뉴얼 유무 ····· 71
4) 사전투표 후 선관위에서의 분리작업 ····· 73
5) 허술한 개표장 준비 상황 ····· 74
하. 투표함 이송 시의 허술한 보관 절차 ····· 74
거. 개표장에서의 실수 및 기강헤이 ····· 75
너.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 77
더. 주의할 점 ····· 78
러. 정보공개 요구 ····· 81

5. 성 과 ····· 85

6. 회원 후기 ····· 87

부 록: (1) 2017수122 대통령선거무효소송 ····· 135
(2)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 142
(3) 양천구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백서 (차대욱 님, 양천구) ····· 144

찾아보기 ····· 150

현행 투표 제도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엉터리!

자유시민이 최선을 다해

부정선거를 막아낸다!

'공명선거시민지원단'이 하는 일

- 투표 과정 참관
- 관외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참관
- 투표함 봉인 참관
- 사전투표함 이동 감시
- 사전투표함 보관시설 적합성 및 보관상태 감시
- 관외 사전투표지 (우체국으로부터) 인수 참관
-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감시
- 전자개표 참관
- 전자개표 일부 샘플링 후 수개표와 대조

지원단 신청 | 2020korea.com
문자 | 010-3330-1142
이메일 | 33coko@gmail.com

공명선거지원단 활동 보고를 드리며

박동숙 (용산구, 편집자)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은 뱅모 박성현의 제안으로 2019.10.30.에 발족한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의 적극적인 단기 유권자 운동 사업이었습니다.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는 서울 서북지역 유권자의 각성과 조직화를 목표로 결성되었으며, 첫 활동은 공수처법과 연동제 비례대표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과 지역구 의원 사무실 방문이었습니다.

2020. 1. 2에 뱅모의 사무실에서 열렸던 서북연대 정기 회의에 참석한 회원 13명은 뱅모의 제안인 “2020 선거 혁명과 부정선거 저지” 캠페인을 새로운 유권자 운동으로 결정하고, “사전선거가 조작 위험이 있으므로 거부하자”는 뱅모의 새 캠페인에 동참, 2020. 1. 21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를 시작으로 선거 감시와 부정선거 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발간된 뱅모의 『탄핵 다이제스트』 배포, 회원 모집을 위한 길거리 테이블 행사,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 부스 활동과 아울러, “공정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등과의 연대를 통해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까를 고심했습니다.

1월 17일, 첫 홍보 테이블을 아현역 1번 출구에서 펼친 저희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길거리 테이블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동지애와 함께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했지만, 활동 초기에는 세부 활동 목표가 막연하고 인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뱅모께서 제안하시는 새로운 활동의 반영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서북연대 전 구역의 지역구 선관위 보관소를 지키고 투표함의 이동을 감시하며, 선관위 개표 참관인, 정당 투표 참관인, 정당 개표 참관인으로 투개표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확인하는 세부 활동 방향이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직접 경험한 선거의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들을 담았습니다. 이는 불과 1년 반 뒤면 시작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22. 3. 9)와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 준비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북연대의 경험과 연구 자료들을 한데 모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용기와 행동을 자축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기초로 삼으려고 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선거라는 제도의 기술적 측면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100여 일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을 충원하고, 카톡을 통해, 또는 직접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4.15 총선 감시 활동은 석 달 여에 걸친 연구 과정이었고, 회원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공명선거지원단은 사실상, 처음으로 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발족한 보수우파 시민단체였으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훌륭하게 그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우리의 수고와 연구 과정, 그리고 몰라서 일으켰던 혼선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계속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험과 자료들을 묶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자유시민본부의 첫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 뱅모의 공명선거지원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캠페인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지난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이 꿈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 총선 개표일 4월 15일까지의 기록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정 개표 문제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서북연대의 윤도원, 정일용 고문, 김창조 회장, 개표 레이아웃 전체를 구성해주신 김호표님, 사전투표일까지 휴가를 내서 현장을 뛰어다니신 최홍균님, 시어머님을 모시면서도 총선 3일간 정당투표 참관활동을 해주신 강소향님, 병원을 회의장으로 내어주신 손정효 원장님, 그리고 매일 캠페인에 나서주신 유경호님과 조선구님, 언제나 힘을 주시는 석운희님, 광화문 부스 활동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고, 바람에 찢어진 플래카드를 멋지게 수리해주신 김근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시며 안타까워 하셨던 민경의님, 언제나 제 옆에 있었던 김서현님, 그리고 미얀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김대환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뱅모의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에 동참해주신 여러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1. 서 문

이영세 님 (은평구, 대구사이버대학교 (전) 총장)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조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 1항에 의하면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추진되도록 감시하는 기능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건국된 이래 수많은 선거가 있어 왔지만 각종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를 비롯해 근래에 와서는 사이버선거에 이르기까지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부정선거로 인해 얼룩져왔음이 사실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행위가 때로 도둑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해 10월 30일에 백모 박성현 선생의 제안으로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를 중심으로 한 “공명선거시민지원단”이 결성되었다. 이 지원단은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활동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투표과정 감시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많은 자유시민들이 이 취지에 호응하여 참여함으로 민주주의는 자유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로 지켜져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보여준 것은 실로 희망적인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전철역에서 사전투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하였고, 투표를 개표하는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투표함을 지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공명선거지원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은 부정선거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그 의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특히 공명선거지원단이 우려한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이 컴퓨터조작설과 함께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공명선거지원단이 부정선거 여부를 밝혀내는데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4.15 총선에서만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선거에서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수고해 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김가제 님 (동작구)

진실되게 서로 협력하며 살지 못한 지난 세월

우리에겐 정치꾼들에게들 속은 것만 같았는데!

박성현 대표님 덕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다시 알게 되었네. 우메!

감탄과 한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박정희 대통령의 '꼭 잘 살아보세' 그 열정과 고난 극복을 생각하며

이제 이 나라가 좌파에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병풍처럼,

때로는 팻말을 걸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며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의 활동 소견

윤도원 님 (마포구)

"공명선거(公明選擧)"란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화합하기 어렵고 사회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과정이나 절차가 잘 지켜지고, 선거인이 자신의 뜻대로 투표하여 선거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1)]

이렇듯 공명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국민화합과 나라의 발전은 물론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사태로 번진다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야당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에 후보자를 낸 군소정당이 선거결과(사전투표)에 의혹이 있다고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 투표함 등 투표관련 서류 및 전산자료(투·개표 전산서버)를 보전처분 신청하고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공명선거지원단'이 주최하는【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저지】세미나를 개최하여 몇몇의 토론자로 나선 선거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제21대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도록 '2020 총선혁명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적으로 자유시민 세력의 역할론으로써 첫째, 태극기 애국세력의 총선 참여, 둘째, 독립유권자 조직의 구축과 총선 혁명 역할, 국제적으로는 미중문명전쟁과 한국 총선, 미북 관계 변수와 북한도발 등의 국내·외적인 함수관계를 모색하는 뜻있는 세미나를 기반으로 삼아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는 권역 시민단체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애초에는 회원 수의 부족과 경험 미비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활동한 결과, 소기의 성과와 유권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최근의 사전선거 관련 의혹으로 일부 후보자의 선거관련 "보전처분"과 "4.15 총선 무효소송"을 목도 하면서 국민화합과 나라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는 오늘이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명선거 지원단 활동을 마감하며 드리는 말씀

김창조 님 (용산구, 서북연대 회장)

"와!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동지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탄핵 이후 마음고생이 그 얼마이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 주말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노심초사 태극기를 흔들며 뭉개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썼습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슬아슬한 개표로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의 마지막 밤샘 노력은 결국 꽃을 피웠고 4.15 총선 승리로 우리의 힘든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개인존엄을 지켜내어 번영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해나갑시다. 자유시민본부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명선거지원단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4.15 선거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진리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다가오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개개인은 정치교양을 길러야 하고, 우리의 단합된 파워를 보여주어야 할 때는 주저 없이 나서야 하며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끌어당기는 스마트한 전략 아이디어를 항상 고민해서 조직 활동의 방향성에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차기 대선이 필연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은 기회일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불쌍해져가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구해내야 한다.

그동안 공명선거지원단 활동 중에 다양하게 경험했던 소중한 정보를 이 보고서에 담아내는 선배님들과 후배 동지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가볍지 않은 편집량을 소화해 내면서 결국 결실을 맺은 박동숙 간사의 집중력에 존경을 보내드린다.

이로써 총선 패배로 입은 우리들 상처를 깨끗이 아물리면서 차기 대선에서 이기는 유용한 전략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캠페인의 목적

2020. 4. 15. 총선감시활동으로 뱅모께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전투표의 제도적 허술함과 투표 조작의 위험성을 알린다.

(2) 《사전투표하고 놀러가자》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는, 사전투표에 내재한 선심성 요소를 알린다.

(3) 유권자가 단결·감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4) 사전투표의 봉인·보관·이동 감시.

※ 4.15 총선 시민 감시 활동 소견

이석조 님 (은평구, 주 불가리아, 케냐 대사 역임)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전자개표, 편향적인 선관위 음모, 중국의 선거개입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synchronized된, 완전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내용은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전투표, 전자개표제를 폐지하고, 선관위를 완전 개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전 살포문제 입니다. 아시겠지만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금전 살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일곱 살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는 40만원, 일반 가구에게는 백만 원을 주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를 했답니다.

금전 살포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한동안 일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 살포 대신에 전자개표기라든지 다른 선거 조작방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금전 살포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중공이 한국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을 때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선거 방법을 총동원한 모양새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최대 야당인 미래 통합당까지 부정선거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물론 공산국가가 되면 선거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만. 만일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번에 자원해서 개표 감시단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함이 도착하고 봉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어물쩍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봉인 당시 서명이 없으니 대조할 수도 없던데요. 개표하는 순서도 왜 사전투표를 제일 나중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에서 지적할 사항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日當받고 개표하는 사람도 전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여부는 나중에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획되어 왔으니 어떻게 현장에서 찾아내겠습니까? 저는 이 선거가 처음부터 사전투표제도 전자개표제도 같은 데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잘못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해킹을 하고 프로그래머를 동원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을 누가 언제부터 왜 도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투표율(국민참여율)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문제는 공정성을 지킬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직성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편향적인 선거관리자들에게 선거가 맡겨졌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선거 예에서 보듯이 사전투표함의 투명성 없는 보관문제(현재는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 투표함 운반문제, 전자기기(전자투표기, 계수기 등)와의 연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의 개연성 문제 등은 저들에겐 역설적으로 부정투표를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전투표제라는 제도도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공정한 선거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닐까요? 투표율 약간 높이려고 굳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전투표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우선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공휴일에 선거일을 정합니다. 그래도 투표율은 50% 전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교육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도록 해야지, 사전투표 같은 편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되겠습니까!

전자개표기제도도 이용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첨단장비는 악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본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편리해도 그 부작용이 중요하고 심각할 때는 그 제도는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는 전자개표기라

는 것을 고집하고 있고,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계수기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까지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급해도 개표가 몇 시간 더 걸린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전자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게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 전자기기기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제도를 관장하는 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 현 정부 지지성향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 성향에 맞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는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공명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www.2020korea.com / 010-3330-1142
YouTube
뱅모의
세뇌탈출
유튜브에서 검색

3. 활동 전개

가. 활동 전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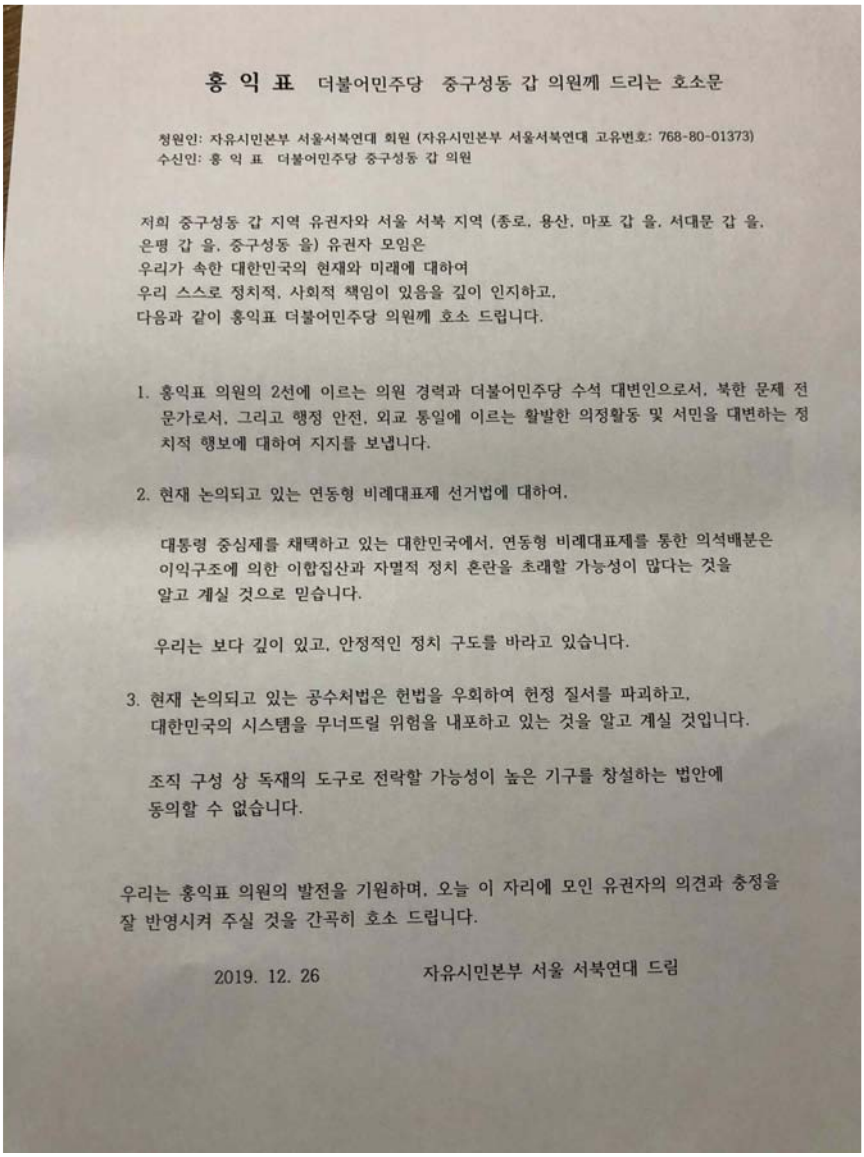
(1) 활동의 시작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공수처 반대 책자배포, 서북연대 정기회의

2019. 12. 4. 지상욱 의원
(중구성동을, 바른미래당) 방문

2019. 12. 26 홍익표 의원
(성동갑, 민주당) 방문

중구 을지로입구 공수처 반대 테이블 행사
(2019. 12. 16.)

2020. 12. 26. 김영호 의원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방문



홍 익 표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 갑 의원께 드리는 호소문

청원인: 자유시민본부 서울서북연대 회원 (자유시민본부 서울서북연대 고유번호: 768-80-01373)
수신인: 홍 익 표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 갑 의원

저희 중구성동 갑 지역 유권자와 서울 서북 지역 (종로, 용산, 마포 갑 을, 서대문 갑 을, 은평 갑 을, 중구성동 을) 유권자 모임은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호소 드립니다.

1. 홍익표 의원의 2선에 이르는 의원 경력과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행정 안전, 외교 통일에 이르는 활발한 의정활동 및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지지를 보냅니다.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배분은 이익구조에 의한 이합집산과 자멸적 정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다 깊이 있고,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법은 헌법을 우회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 구성 상 독재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익표 의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유권자의 의견과 충정을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9. 12. 26 자유시민본부 서울 서북연대 드림

각 의원사무실 방문 시 전달한 호소문

서북연대 목요일 정기회의 (2020. 1. 16.)

(2) 2020. 1. 17. 테이블 홍보행사 시작.

▪ 마포구 아현역앞

▪ 서대문구 백련시장 앞

▪ 서대문구 신촌

▪ 종로구 명륜동

(2) 2020. 1. 21. 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 세미나 (프레스센터)

(3) 2020. 2. 1. ~ 2020. 2. 22. 광화문 부스 활동:

▷ 토요일 태극기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 처음으로 부스 설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 공명선거지원단 회원모집, 세뇌탈출 홍보, 『탄핵다이제스트』, 『공명선거지원단이 자유한국을 만들어냅니다』 책자배포.

(3) **2020. 2. 29.** 토요 야외미팅 시작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오후 1시).

▷ 첫 미팅: 광화문 애국집회가 COVID-19로 금지됨에 따라 소규모 3.1절 기념식으로 진행. (정일용 님 기념사, 윤도원 님 축사)

▷ 이후: 회원 모집과 책자 배포, 명찰 전달, 지역구 활동단위 구성, 전략회의, 1인 시위 샌드위치 패널 배포 및 수정, 회원 간 친목 도모.

(4) **2020. 3. 1.** 대외 현수막 게시 활동 시작. (3/1~ 4/5, 각 2주간씩 게첩)

▷ 《선거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일 입니다! 당일투표 합시다.》

-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청 공식게시판
- 종로구, 중구, 성동구는 공식게시판이 없어 게시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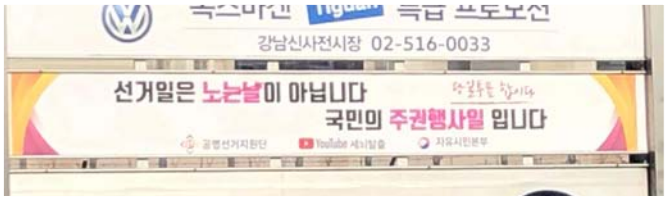
※ 총비용: 4,154,000원; 후원금: 10명, 4,154,000원;
제작사: 이룸인

▪ 서대문구 홍은초교 앞

▪ 마포구 아현시장 입구

▪ 은평구 역촌주민센터 앞

▪ 용산구 숙대입구



(5) **2020. 3. 12.**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1인 시위 시작.

▷ 《구멍숭숭 사전투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NO》, 《대한민국이 장난이냐? 헌법 납치 음모 결사반대》

- 당초 샌드위치 패널은 사전투표 관련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100만인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3/1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헌반대 표어가 뒷면에 추가됨.

(6) 2020 3. 16. 웹카드 제작 배포 시작
(이진욱 님과 친구들)

(7) 2020. 3. 17. 그림 동영상 배포 활동 시작.
- 화가 최병선 님 《일어나라, 대한민국》 시리즈 제작
- 3/28 유튜브 계정이 폭파됨. 4/5 다타라 갤러리로 다시 시작.

(8) 2020. 3. 지역구 별 단위 조직화를 시작하고 각 팀의 리더를 선정.

∞ 용산구: 김창조, 김호표
∞ 중 구: 정일용
∞ 성동구: 이선희
∞ 마포구: 김근수, 석운희, 윤도원
∞ 종로구: 강소향, 이형복
∞ 서대문구: 최홍균, 김서현, 원선자
∞ 은평구: 민경의, 정유순, 박병관

나. 전략 수정

3월 중순 경, 새로운 활동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됨.

▷ 인원 부족으로 투표함 감시 활동을 할 팀 구성이 어려움.

▷ 광화문집회 해산에 따라 회원 확보가 어려워짐.

▷ 적은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거감시 전략을 모색.

▷ 처음 목표였던 선거 후 투표함 지키기에서,

(1) 선거 전 홍보. 사전투표 안하기·개헌 반대 1인 시위.

(2) 투표장 참관 활동, 개표장 참관활동 참여.

(3)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봉인·보관·이동 감시로 전략 수정.

다. 활동 전개 (후반)

새로운 감시활동 목표 아래 활동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함.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신청을 적극 독려함.

1) 선관위 개표참관인 신청

▷ 3/17 (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특별공지 됨.

- 2020. 3. 21. (토) 09;00~ 3. 25(수) 18;00
- 5배수 등록 추첨. 1일당 5만원 수당. (식비 별도)

▷ 3/23 (월) 오전 9시경 이미 마감.

▷ 4/7 (화) 추첨 결과 통보.

2) 사전투표 정당투표참관인, 정당개표참관인 신청

▷ 선거일 2일 전까지 각 정당 지역구(의원 후보, 비례대표 후보, 또는 사무실 등)에 신청.

-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음.
- 군소정당 신청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음.

3) 선거일투표 (당일투표) 정당투표참관인, 정당개표참관인 참여

▷ 군소 정당 신청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함.

▷ 각 정당 중앙당이나 지역구에 미리 전화하고 지원서를 써서 도장을 순차로 받아 선관위에 제출.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음)

-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임.

※ 사전투표 참관인 신청 후기 김호표 님 (용산구)

용산구 선관위에 정당추천 사전투표 참관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제는 투표소가 있는 동회 (주민센터)에 제출하라네요. 말다툼 끝에 이 곳 (선관위)에 접수하였습니다.

※ 선거일 투표참관과 개표참관 윤도원 님 (마포구)

정당추천 투표참관인 경우 1개 투표소에 오전(오전 6시~12시)과 오후(12시~오후6시)로 나누어 2인이 투표참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참관하는 사람은 투표가 마감하는 오후 6시에 투표함 봉인과 참관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일정이 마감 되지만 여기서 명심할 것은 투표관리관에게 개표참관도 하겠다고 요구하면 개표장까지 투표함 이송 차에 함께 동승하여 개표장까지 가서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 사전선거 참관인:

- 사전투표는 4월 10일~4월 11일 시행. (2일간)
- 각 투표소별 1일 2인의 투표 참관.

4월 10일과 11일 오후에 참관하는 사람은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지역 선관위로 이송하는데 이 때에도 이송차에 함께 동행하여 보관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 공지단의 활동가가 개표날까지 5일간 감시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동영상 등 선거관련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참여현황:

∞ 종로구: 강소향 - 4/10,11 기독자유통일당 이화동 사전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오후)
- 4/15 기독자유통일당 청운초교 선거일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오후)

이형복 - 4/10,11 기독자유통일당 평창동 사전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오후)
- 4/15 기독자유통일당 평창1 선거일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오후)

장일식 - 4/10,11 기독자유통일당 가회동 사전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김영구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 서대문구: 최홍균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이혜숙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 은평구: 이영세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이석조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 용산구: 김호표 - 4/10,11 자유공화당 서빙고동 사전투표소 정당참관인 (오전, 오후)
- 4/15 자유공화당 정당 개표참관인

∞ 마포구: 윤도원 - 4/15 기독자유통일당 정당 개표참관인

∞ 경기고양: 박민자 - 4/15 기독자유통일당 일산구 풍동투표소 정당 투표참관인 (오전)
- 4/15 기독자유통일당 일산동구 식사3투표소 정당 투표참관인 (오후)

4) 선관위 외부 감시활동조 편성

▷ 각 지역 활동가들이 첫날 사전투표가 완료된 4/10, 18;00로부터 4/15, 18:00 개표소로 이동할 때까지 봉인, 보관, 이동 감시하여 개표장으로 사전투표함이 모두 이송되는 과정을 24 시간 지키도록 함.

▷ 선관위 외부 감시 활동은 안전해야하므로 차량 이용, 정문 근처에 대기 또는 순찰. 핸드폰과 카메라를 이용해 이상 상태 발생 시 신고.

- 경찰서 112, 또는 지역파출소. 선관위 신고 1390
- 미래통합당 각 지역후보 사무실

▷ “공정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

▷ 지나친 부담을 피하도록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감시조에 넣지 않음.

▷ “지역 특성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원칙으로 함.

5) 서북연대 카톡창을 통한 총선 감시활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 사전투표 절차 개괄과 각 선관위 위치 (투표함 보관소) 지도 공유.

▷ 3/24 이후 많은 회원이 확충되며 각 지역의 준비 태세가 빨라지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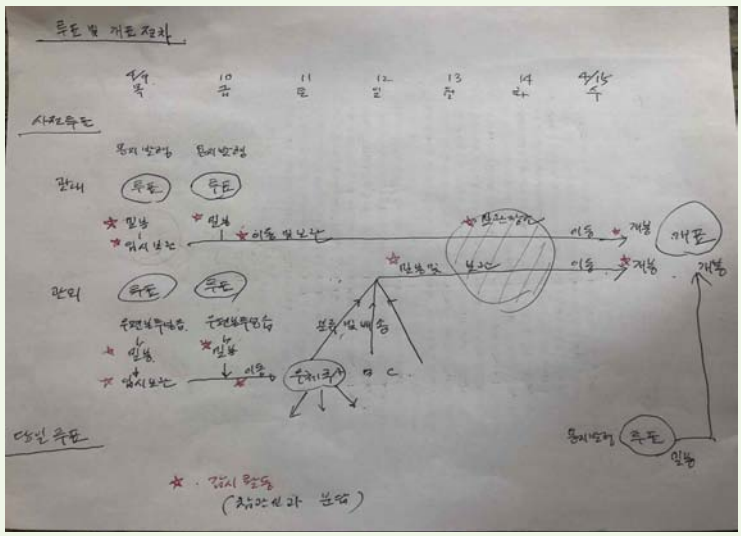
※ 3/24 카카오톡 오리엔테이션 박동숙 (용산구)

1. 안내 드립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16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으로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 개표참관인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표참관인은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공명선거 지원단의 목표가 원래 선거결과 지키기에 있었으나, 최근 여러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 저희의 전략을 선거 전 홍보와 선거 결과 지키기로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16일 남은 사전 투표일까지 최대한 당일투표와 개헌 반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제안을 보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원 중 지역구가 분류되지 않으셨거나 명찰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사진과 지역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전략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회원들은 은평 공정연과 협력하여 선거 전 캠페인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뱅모가 이 공명선거 감시를 타깃으로 잡았던 1월 2일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우파의 각성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으며, 3.1절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결과 감시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는 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개요를 그림으로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이 적고 지금 이 결과가 석 달 동안 애써온 것임을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람을 모으는 작업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 봅시다. 일을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사후 결과지키기가 목표였으나, 이제부터는 다음 4/9까지 선거 전 홍보에 주력한다. 1인 홍보패널과 차량 스티커를 최대한 많이 배포한다.

- 4/9 까지는 당일투표와 개헌반대 홍보.
- 4/14 까지는 개헌 반대 홍보.

(2) 적극적으로 투·개표 참관인 신청. 성공하신 회원들은 참관활동.

(3) 감시활동은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하므로,

1) 최소한의 법적 장치: 경찰서, 지역 선관위, 미래한국당 후보사무실 등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미리 가지고,
2) 스티커를 붙인 차를 이용, 선관위 건물을 돌거나 정문 근처에서 대기.
3) 핸드폰과 카메라를 이용, 이상 상태 발생 시 신고.
4) 여기서는 공선협과 다른 우파 단체들과 연합하여 일을 분배한다.
5) 당일 투표의 감시활동은 안팎으로 역할을 분담해 한다.

간단히 말하면, “선거 전 홍보에 주력하고, 실내 감시와 실외 감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입니다. 이제 3주 남은 총선에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길 줄 몰랐다면 바보겠죠. 뱅모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역의 표를 지키도록 만들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애써봅시다.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사후 보관 감시는 차량 스티커와 차량 내 감시로,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어제 뱅모의 어려운 세미나를 마치고 어제 오늘 내린 결론 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도 모두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로 교육 동영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한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는 우선 광야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때와 장소를 찾아 당일 투표와 개헌 반대 홍보에 나서주세요. 딱 16일 남았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 지도를 올려 드립니다. 지역마다 지역 리더의 전화번호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6) COVID-19 사태로 인해 각종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며, 각 지역의 1인 시위가 활발해짐.

▷ 출근길 지하철 캠페인 10량×4회×5명×16역=3,200명

▷ 연세 높으신 회원들의 매일 캠페인

▷ 산책길 캠페인

▷ 매주 토요일: 홍대역 앞, 공덕역, 광화문, 종로, 용산역, 신촌역, 백련시장 앞, 영천시장 앞, 건대병원 앞, 상암월드컵공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을지로입구, 명동,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소수 인원이 캠페인 활동.

7) 우선, 선거 전 홍보에 주력:

▷ 1인 시위, 휴대폰을 활용한 소식 전하기.

▷ 차량용 스티커, 홍보인쇄물, 회원 확보와 명찰 만들기.

8) 선관위 방문 활동:

관외 사전투표 행낭과 거치대
(은평구 선관위 2020. 4. 3.)

용산구 선관위 방문
(2020. 4. 2.)

▷ 투표함 감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파악하고, 실제 선관위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 절차와 보관 절차를 수행하려는지, 또한 시중의 의혹이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보고자 함.

▷ 서북연대 내 6개 선관위 방문.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세부 사항은 항목 라. 참조]

9) 공식 선거기간

▷ 선거법 위반 사항 없는지 주의 필요

- 공식 선거기간: 4/2 ~ 4/14 (13일간)
- 이때는 각급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정선거감시단이 선관위 안팎으로 운영됨.
- 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후보 비방 등을 조사, 충돌이 생기면 스티커를 끊음.

※ 공직선거법 제10조의 2 (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18. 4. 6.〉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공직선거법 제10조의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9., 2018. 4. 6.〉

③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6.〉

10) 4/1 오후 2시~5시에 있었던 성동구 사전투표 캠페인에서 선관위 공정선거감시원, 중앙선관위 직원과의 충돌로, 회원 보호 차원에서 샌드위치 패널 스티커 교체.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하자!!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밉다고 투표 안하면 국민 주권 포기!! 당일투표 하세요.》로 교체.

※ 1인 시위 패널 내용을 일부 바꾸게 된 경위

(1) 1인 시위용 샌드위치 패널 문구와 관련한 차대욱 님의 문의:

▷ 차대욱 님 질문 (4/1(수) 오전 10:33):
간사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을 가지고 1인 시위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시비삼지는 않겠는지요? 저희는 오늘도 홍대역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동숙 답변:
차선생님.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 받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인데요. 특별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길가는 사람과 그 내용을 가지고 시비가 붙어 싸우지 않는 한 경찰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역법에 관한 것입니다!!

1인 시위는 전적으로 안전하지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경찰이 와서 시비를 걸만한 빌미를 주지 마세요. 역 주변을 걷거나, 산책하듯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차대욱 님: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인 시위용 패널의 문구가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선관위의 해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여쭈어본 것 입니다.

(2) 4/1 오후 2시 성동구 건대 앞 시위 (8명 참여) 에서 선관위 공정선거 감시단과 마주침, 이후 중앙선관위 직원이 출동. 우리 패널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 팀 리더가 중재하여 스티커 발급을 막았음.

(3) 4/2 회원 보호 차원에서 캠페인 내용을 바꿈.

11) 각 팀의 활동 역량에 따라 사전투표 정당 투표감시인, 선거일투표 정당 투표감시인, 정당 개표감시인, 선관위 개표감시인 등의 역할을 신청, 수행함.

12) 한편으로 순찰조를 구성, 투표소에서 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할 때, 봉인할 때, 보관 감시·확인, 봉인유지 감시·확인, 개표장으로의 이동과 도착을 감시·확인.

▷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지에서 공정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연대하여 순찰조 구성.

13) 4/11(토) 공명선거지원단의 마지막 광화문 야외미팅에서 선거 이후의 표어 《4.15 총선 100년을 위한 선택》 제시.

라. **선관위 방문 결과 보고** (각 8명씩 방문, 각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연, 견학)

1) 방문 일정:

∞ 4/2(목)	오후 2;00	마포구 선관위
	오후 3;30	용산구 선관위
	-	종로구 선관위 (※ 공정연과 연대해서 방문)
∞ 4/3(금)	오후 2;00	은평구 선관위
∞ 4/4(금)	오후 3;30	서대문구 선관위
∞ 4/6(월)	오후 2;00	성동구 선관위

2) 각 선관위 주요 질의, 참관 내용

가) **마포구**

▷ 선거주무관과 계장이 참석.

▷ 사전투표의 제도적 측면: 선거라는 기술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전달. 특히, 사전투표의 허점과 고비용 구조를 지적.

Q.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의 제도적 차이는?

A. (1)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군 투표는 사전투표로 대체됨.

(2)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사실상 사전투표가 부재자 투표를 대체.

(3) 전국 어디서나 등록된 신분증만으로 투표 참여가 가능. 전국통합명부로 간편하게 유권자등록 및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함.

(4) 이에 비해 부재자투표(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움.

(5) 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외교행낭을 통해 공항 ⇨ 외교부 ⇨ 우체국 ⇨ 각 선관위로 이동하는 동안 투표지 보관 장치가 없음.

▷ 사전투표 이송, 보관 절차 전반과 보관 장치 현황:

<u>투표 완료 후의 투표함 이송 절차</u>

Q. 우체국 인계 시의 절차: 어디서, 언제 인계하나?

A. (1) 선관위에서 우체국으로 인계할 때: 반드시 정당 투표참관인의 출석 하에, 개수를 확인한 후 정당 투표참관인이 서명.

※ 마포구는 사전투표 첫날 종료 시 모두 선관위로 이송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우체국에 매일 인계한다고 함.

(2) 관외사전투표지가 우체국을 통해 마포구 선관위로 돌아올 때: 매일 일정한 시각에 (하루 2번) 우체국이 배달하고, 그 시각에 KT텔레캅, 선관위, 정당참관인이 같이 참석하여 개수를 세고 확인하여야 함을 설명.

<u>이송 시의 경비</u>

Q.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은 어떻게 하나?

A. (1) 선거사무국장의 사무실 책상 옆에 두는데, CCTV는 없음.

(2) 선관위 사무실은 KT 건물 내에 있고 투표함 호송, 보관, 이송 절차에 KT 텔레캅의 경호를 받음.

관내 투표함 보관소의 현황을 CCTV를 통해 견학.

나) **용산구**

▷ 선거주무관과 계장이 참석.

▷ 《구멍숭숭 사전투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NO》라는 우리 피켓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경계감 표명. 윤도원 님이 잘 유도해주심.

▷ 사전투표 보관상의 CCTV 설치 및 CCTV 영상 공개 내용 설명

- 선관위 보관소 뿐 아니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명륜동 과학박물관 뒤)에서도 업무시간 내에는 보관 상황을 공개한다 함.

▷ 우리의 피켓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알려줌.

-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도가 고비용 구조이고,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부재자투표에 비해 지나치게 쉬워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전투표를 덜 하자는 캠페인이 선거법에 어긋날 수 없다고 맞섬.

▷ 지난 2017 대선 당시, 용산 선관위 복도까지 난입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내세우며 업무방해를 한 조직은 문성근의 “시민의 눈”이고, 이 때문에 각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달았다고 설명.

- 용산구 선관위도 문성근의 조직을 싫어했음.

▷ 4/2 방문 시 용산구 선관위는 거소투표 우편에 보낼 공식 선거 홍보지 작업으로 바빴으며, 주무관은 작업 현황을 보여주고 설명함.

▷ 용산구 선관위는 서부역 뒤 코레일 건물 2층에 있어 (민노총 소속인 코레일 노조 사무실과 같은 건물) 취약해보였으나, 건물의 구조는 3면이 막혀 있어 감시하기 쉬울 것으로 보임.

다) 은평구

▷ 선거주무관(과장)과 선거 관리 계장이 참석.

▷ 질의내용: (a) 통합명부 문제

(b) 시스템 문제

(c) 내부부정 문제

(d) 관내, 관외 투표함 보관 시 감시인(경찰과 참관인)들의 역할과 매뉴얼 유무

(e) 인쇄된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

(f) 시민 감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g) CCTV, 투표함이 아닌 행낭 사용에 대한 규정 미비

(h)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미비

Q. 관외 사전투표의 인계 절차와 회수 절차는?

A. 투표가 끝나면 매일 선관위로 옮겨 우체국에 인계.

-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는 해당 선거구 우편물은 매일 일정한 시각 우편물이 도착할 때, 정당 참관인들의 입회 아래 확인하고, 개수를 세어 관외 사전투표함(이것은 행낭이 아니라 일반 흰색 상자형 투표함)에 넣는다고 함.

- 약 5일 동안 계속 배달이 되므로 각 선거구의 사무국장실에 둔다고 함.
- 사무국장의 집무실임을 고려, CCTV는 운영하지 않는다 함.

Q. 보관실과 보안 장치는?

A. 선관위 위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음(여기도 KT,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있는 건물임). KT텔레캅의 경호를 받음.

- 은평구 선관위에서도 문성근의 “시민의 눈”의 성화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법에도 없는 CCTV를 달았다고 설명.

▷ 투표함 봉인 시연

■ 관내 사전투표함은 거치대와 튼튼한 행낭. 틈이 없고, 무게를 견딜 만한 행낭, 행낭을 위에서 감싸는 뚜껑, 이렇게 세 부분인데, 이들을 묶어주는 일자형 고정핀(봉쇄)이 있고, 좌우로 열리는 투입구를 막는 핀형 고정핀이 있음.

■ 봉인지 등을 일일이 열고, 잠그고, 붙이고, 떼고, 자르는 시연을 해 보여 주었음.

- 봉인지는 붙였다가 떼는 즉시 흰 줄이 생겨 바로 훼손 여부를 알 수 있음.

■ 봉인지는 근본적으로 1회용임. 봉인 고정핀도 1회용임.

- 따라서 자르고 뗀 후 새로 붙이면 흔적이 남지 않고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이것은 범죄이므로 질문하지는 않았음. 봉인지와 봉인 고정핀은 여분이 많았음.

▷ 은평구 선관위의 구체적인 설명과 시연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음.

- 두 분의 성실한 답변과 업무 태도에 모두 즐거운 마음이었음.
-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에 “우리도 목이 달려있다”고 답함.
- 바깥 주차장 입구, 경비실에서 행선지가 어디인지 밝히고 들어가라는 부탁과 함께 며칠 전에도 시민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려했으며, 선관위 건물 안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설명.
- 우리가 사용하는 명찰에 공명선거 지원단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

선거 기간 중 선관위를 출입할 때는 명찰을 꼭 달고 들어오도록 부탁함.

라) 서대문구

▷ 선거 관리 주무관과 계장이 참석.

▷ 윤도원 님이 주로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하심.

- 이에 대해, 주무관은 “우리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늘 머리에 이고 삽니다”라고 말했음.

▷ 사전투표와 관련한 떠도는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령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음.

▷ 투표함은 매일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로 이송하여 보관실에 보관, 봉인한다고 함. 보관실에는 CCTV와 작은 창이 있음.

마) 성동구

▷ 선거관리 주무관(17년차)이 참석. 질의응답.

▷ 질의내용: (a) 개표 절차, 개표 방법,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수개표 등 개표 시스템

(b)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

(c) 통신이 멈추는 등 특별비상상황 발생 시의 이머전시 플랜

(d) QR코드와 바코드, 일련번호, 전국통합선거인명부, 전자개표 등, 국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시중의 의혹

- 개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S/W를 사용함. 전국통합명부는 지자체가 제공하고, 행안부가 제공함.

Q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가?

A.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호칭하는 전자투표, 전자개표기라는 말은 없고, 『투표지 분류기』 인데, 이것은 순식간에 무효표를 분리하고, 1·2·3 순으로 찍힌 번호에 의해 분류시키는 장치임. 그 후, 『심사계수기』 를 통해 천천히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침.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 무효표로 분류된 투표지는 전체를 수작업함.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눈으로 확인, 그리고 무효표 수작업의 단계를 거치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더라도, 사람의 눈이 마지막 단계임.
- 이번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어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개표원은 대체로 은행, 세무관공서, 학교 등에서 차출됨. 개표일 오후 4시에 개표장으로 입장하고 개표가 끝나야 나올 수 있음. 이때 피로가 쌓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 리스크 요인이 됨.

  ※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 선출 투표지가 길어, 거기에 맞춘 기다란 크기의 심사계수기를 새로 도입했음.

Q2. 개표 작업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

A. 개표작업은 ① 개함부 정리(투표함 열기), ② 2. 투표지 분류(고속 설정통로로 분류·집산), ③ 심사계수기(육안식별, 재검표를 위해 저속운행)하고 ④ 미확인 투표지는 따로 이동시켜서 육안검표.

- 개표장에는 폐쇄형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일반 Wi-Fi 차단) 외부 통신망 개입에 의한 개표조작 불가능.

Q3.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의혹이 있음.

A. 사전투표 시 전국통합명부로 투표자를 확인하므로, 중복투표(선거일에 또 투표하는 것)는 불가함.

Q4. 즉시출력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있으나 선거일투표 용지에는 없음.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기는가?

A. 선거명, 선거구명, 사전투표소명, 일련번호, 이 4가지만 들어있다고 답변. (4. 논의와 학습, 마. QR코드, 바코드 문제 참조)

▷ 투표용지에 임의채번(任意採番, 일련번호를 만들 때 전체 숫자구간 중에 아무 숫자나 한 번 골라서 쓰는 방식(2020. 1. 21.【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 자료 참조))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잠정투표 프로그램:

- 일시적 투표 중단 사태를 대비하여 인근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에는 차량이 준비 되어있음.
- 시스템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거나 하지 않음 바로 폐쇄하고 이동함.
- 국가 재난 발생 상황 시 가동.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음.

※ 최홍균 님 (서대문구) 보고:

실제로 개표소에는 투표 마감시간 6시 이후에 119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개표장 입구까지 설치하여 화재 등 긴급 소방작업 준비를 하였고, 경찰 차량과 대원들이 비상대기를 하였다.

※ 선관위 방문 후의 소감 박동숙 (용산구, 4/6)

지난주부터 서북 연대 내의 모든 선거 관리 위원회를 방문해 조사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의혹들이 선관위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성동구 선관위를 방문한 저희 일행이 공동으로 느낀 점인데요, 이런 보고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만일, 부정선거, 또는 투표 도둑질이 일어난다면, 그게 선관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통합명부, 즉 전국 유권자 명부는 행정안전자치부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이고, 이를 최초로 보고하는 곳은 지자체 입니다. 또한, 선거 시스템, 통신,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를 제공하는 곳은 행안부입니다. 따라서 전국통합명부의 유권자 수 조작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될 것 입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투표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선관위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행안부에서, 즉, 정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지역 내 모든 선관위 방문을 통해, 정권 차원이 아닌, 공공부문은 아직도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부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면, 정권차원에서 지자체와 행안부가 동원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혹과 의구심이 국가 시스템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나치던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 드렸습니다.

4. 논의와 학습

가. 사전투표 제도

(1) 사전투표는 2013. 1. 1부터 시행됨. 사실상 부재자투표를 대체했음. (공선법 제158조. 아래 조문 참조)

-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시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고심하던 시기였음. (2014 재보궐선거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 갑 투표율 22.87%)
- 군 투표는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로 완전 전환.
- 부재자투표로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가 있음.

(2) 투표율이 높아지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020. 4.15. 총선 총투표율 66.2%)

- 사전투표 제도에 선심성 포퓰리즘 요소 남발.
- 우체국을 통한 투표함 이송 보관 시스템: 우체국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 우체국을 통한 관외 투표 시스템 최홍균 님 (서대문구)

사전투표 중 관외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종료 이후 우체국에서 수거한다. 종로구에서는 관외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분류하여 우체국에 넘겼고, 다른 구에서는 투표소에서 분류 없이 우체국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재량이 있었다.

이후 우체국에 도착한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는 하루 2번 바구니에 담겨져서 해당 선관위로 옮겨져서 내부에서 갑/을 등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선관위 알바생들이 각 지역을 분류하여 관외사전투표함에 넣는다. 이 함은 사무국장실에 CCTV 없이 보관된다.

관외 투표지는 선거 전날까지 선관위로 전달되는데, 바구니로 허술하게 전달되는 현장을 지켜본 시민 감시단과 선관위 직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5) 통합선거인명부; 지자체의 공정한 선거인명부 작성이 전제 되어야 함. (공선법 제37조, 아래 조문 참조)

-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공인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데,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정식 등록된 사립학교의 학생증을 포함함.

(6) 통합선거인명부 운영시스템:

- 대용량 서버의 임차와 유권자정보 보안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함.(편집자)

※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2. 1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 공직선거법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 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5. 8. 13.〉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2018. 4. 6.〉

** 군투표는 2014년부터 사전투표로 대체됨
** 부재자 투표:
거소투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2)
선상투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3)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제218조)

나. 재외국민투표

(1)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함.

▷ 재외국민: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즉, 한국국적을 갖고 외국에 영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함.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

※ 국적포기·상실자는 해당되지 않음.

-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 할 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포함)

(2) 논의할 점 (편집자)

1) 재외국민 투표는 부재자신고를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한정.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30일 전에 확정됨. 따라서 국내선거가 시기적으로 멀어 관심이 낮음.

2) 국내 사전투표가 편이성이 높은데 비해,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는 지나치게 낮음.

3) 재외투표는 국내 선거일보다 약 10일 전에 시행되며, 회송용 봉투에 넣고, 외교행낭을 통해 들어오므로, 공관으로부터 출발해 공항, 외교부, 우체국,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가 길고, 보관절차 중 감시체계가 없음.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가 확인)

4) 재외공관에서의 개표가 이루어질 경우, 참관인이 임의로 선정되거나, 인원을 맞출 수 없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7. 3. 9.〉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개정 2012. 1. 17.〉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개정 2011. 7. 28.〉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2. 10. 2. 2014. 1. 17. 2015. 8. 13.〉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 2015. 8. 13. 2015. 12. 24.〉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

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 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재외선거에 대한 소견 이석조 대사님 (전 주 불가리아, 케냐 대사)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제가 2005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권익을 주장하셨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동포재단도 그 때 교민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주불가리아 대사로 재임 중 공관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 된 것도 기억납니다.

그 때 저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재외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이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살러 가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정부는 교민들이 현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착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이민과 교민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억지로 주입시키는 민족주의적 사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교민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민國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그 사회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교민들은 대우를 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정치적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수도 전체 투표의 5%가 되지 않아 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교민들이 참여 하니 그 영향도 자연히 커지겠지요.

재외국민 투표는 원래 군인 투표와 마찬가지로 부재자 투표群에 포함되었는데 사전투표란 새 제도가 생겨 재외국민 투표에도 사전 투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재외국민에게 사전투표가 있다면 더 복잡해질 텐데요. 재외국민 투표는 투표장소, 투표지 보관 및 운송, 투표참관인 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한인들의 감투싸움은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교민들 간에 감투싸움부터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제도는 가능하면 폐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생긴 제도가 없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판도라 상자 같습니다.

다. 개표장 레이아웃

※ 김호표 님 (용산구) 보고

나의 2020.4.15 개표장 참관은 나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1. 사전투표함 내 투표지의 바꿔치기를 봉인지 확인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
2. 조작하기 쉬운, 믿을 수 없는 전자개표기라고 알고 있는 개표기를 신뢰할 수 있는가, 또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가?
3. 개표 후 후보자별 (정당별) 득표현황의 집계과정은 믿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실제득표상황과 다른 득표 수치를 기록하고 등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개표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세히 모르면서 참관하다 보니, 면밀히 살피지 못한 미흡한 면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도 있다.

<u>개표 관련 업무별 담당 부서</u>

서대문구 선관위에서 명지대
개표장으로 출발하는
관내/관외/부재자 투표함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개표장에 도착한 관내투표함

1. **접수부**

▷ 투표장과 사전투표 보관소에서 이송되어온 ① 투표함과 ② 투표관계 서류를 확인 접수.

종로구 개표소

▷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알아두고 확인한다.

(a) 서류를 확인치 못하였다.

(b) 서로 알지 못하는 이송자와 인수자가 연결되는 장소이므로, 투표함 통째로 바꿔치기 가능성에 주의 요함.

2. 개함부

1)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투표함의 봉쇄(잠금핀)와 봉인지 이상 유무 확인.

(a) 참관인은 투표함(사전투표는 행낭)의 봉인지 3장(① 상부 투표지 투입구, ② 전면 봉쇄 위, ③ 후면 봉쇄 위) 이상여부 확인.

(b) 봉인지는 떼었다 붙이면 알록달록한 하얀 색이나 하얀 글씨가 나타난다. 봉인지 이상이 발견될 경우 봉인지를 떼지 말고 개함을 중지시키고, 사진을 찍어 증거확보 후 선관위에 보고하고 처리를 협의한다.

(c) 투표장에서 투표마감 후 이송 직전, 투표함에 부착된 3개의 봉인지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주관하고 각 정당참관인들이 함께 이 사진을 등록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개표장에서는 봉인지 대조절차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

(d) 지금은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개함합니다.”라고 하고 개함한다. 그러나 확인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봉인지 대조절차는 꼭 하여야 하는 필수절차에 넣어야 한다.

2) 개함 후 투표지를 테이블 위에 쏟고, 투표지를 후보자 별로 분류하기 좋게 가지런히 모아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놓는다.

(a) 취급자들이 고의나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하는지 살펴본다.

(a) 대부분의 투표소 참관인들이 봉인지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더라도 같은 당 개표소 참관인에게 사진을 전달하여 개표장에서 투표함의 봉인지 이상여부에 활용하도록 하지 않는다.

3.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1) 이제까지 '전자개표기'라고 알고 있었던《개표분리기》를 운영하는 곳이다.

2) 개함·점검부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기 편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다발로 모아담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받는다.

☆ 받을 때 투표자수가 기록된 투표관계서류와 실제로 인계인수하는 투표지 매수가 기록된 용지를 받는지는 확인치 못하였다.

3) 사진(2)에서 보듯이 후보자 번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류기의 1·2번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분류기의 3·4번으로 분류된다.

- 미 분류된 투표지를 분류기에 한 묶음 넣고 분류기를 작동시키면 후보자별로 투표지가 배당된 번호로 모인다.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 표가 분류기 출구 1번으로 100매가 쌓이면 101번째 표부터는 자동으로 분류 시 출구 2번으로 쌓인다. 2번에 100매가 쌓이기 전에 1번에 쌓인 100매를 분류기에서 빼어내어 고무줄로 묶어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적취한다. 다시 분류기 출구 2번에 100매가 쌓이면 자동으로 분류기 출구 1번으로 쌓인다. 미

래한국당 후보자의 표도 같은 방법으로 배정받은 분류기 출구3·4번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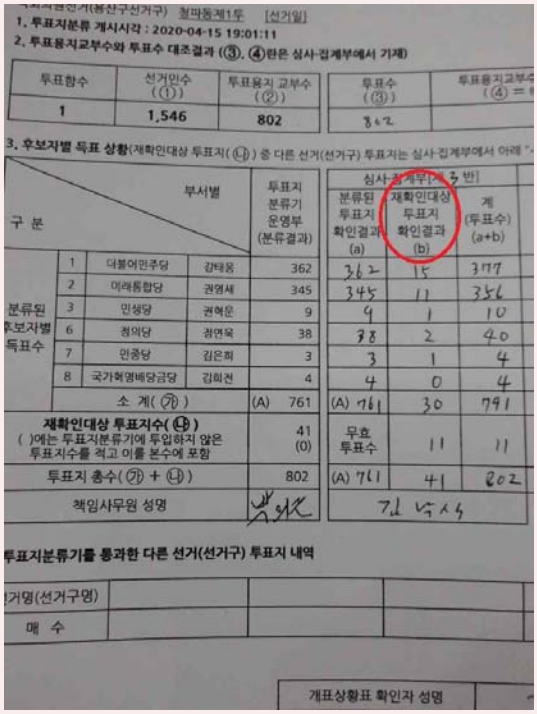
4)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록하고, 책임사무원이 [유효투표 집계 전], [재확인대상투표지 표시 전](사진참조)을 작성, 사인한다. 작성된 서류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 여기서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예:2번이 획득한 표를 매 50번째 투표지를 1번으로 분류하라 라고 조작)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신이 사인한 서류와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한 내역이 그 시간과 함께 기기에 남아있게 된다.

(1)

(2)

투표지분류기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2020-04-15 19:01:11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③, ④란은 심사·집계부에서 기재)

투표함수	선거인수 (①)	투표용지 교부수 (②)	투표수 (③)	투표용지교부수 (④ =)
1	1,546	802	802	

3. 후보자별 득표 상황(재확인대상 투표지(㉡)) 중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아래 "

구분		부서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분류결과)	심사·집계부(1, 2반) 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 (a)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 (b)	계 (투표수) (a+b)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	1	더불어민주당	김태홍	362	362	15	377
	2	미래통합당	권영세	345	345	11	356
	3	민생당	권혁운	9	9	1	10
	6	정의당	정연욱	38	38	2	40
	7	민중당	김은희	3	3	1	4
	8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천	4	4	0	4
소 계(㉮)				(A) 761	(A) 761	30	791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 )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수를 적고 이를 본수에 포함				41 (0)	무효 투표수	11	11
투표지 총수(㉮ + ㉯)				802	(A) 761	41	802
책임사무원 성명					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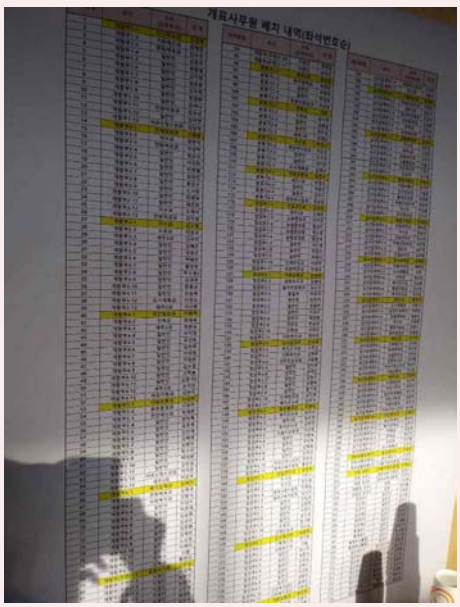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선거명(선거구명)			
매 수			

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

재확인대상투표지 확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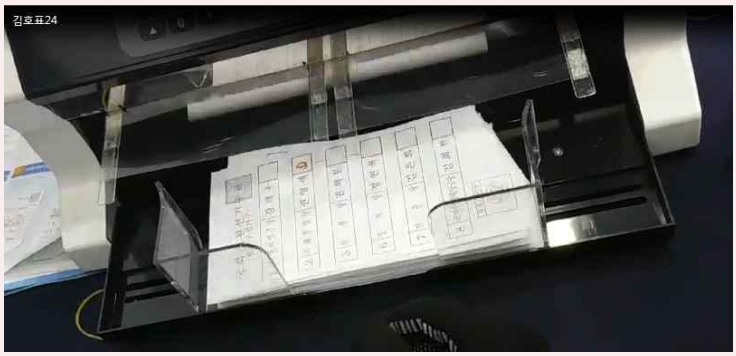
- 실제 득표수 확정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된다.
- 이곳 작업인원이 최소 양당 후보자별 2명(3명?)과 책임사무원이 동시에 움직인다. 인원은 [전체 인원배정표]를 찍은 사진 참조 바람.



전체 인원배정표

4. 심사·집계부

1) 앞의 개표분리기에서 인수받은 후보자별 획득 투표지에 오류가 있는지, 수치는 맞는지를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넣어 확인한다(사진). 즉 분류의 정확성과 득표수를 확인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충분히 육안으로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

☆ 이곳 담당자가 독단으로, 앞에서 넘겨받은 특정 후보의 득표수와 다른 수치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람의 확인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여겨진다. 실제 상황이 없었으니 추론할 뿐이다. 앞의 부서, 즉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담당자가 독단으로 혼자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개표부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곳 부서에서 부정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 앞 조와 개표 부정할 요량으로 감시 소홀을 틈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한두 표는 몰라도 8시간 이상 작업하는 내내, 50매당 1표의 오류를 계속 옆의 동료와 참관인들의 감시 속에 무모한 부정을 저지르겠는가? 한 번만 오류가 발견되면 이미 개표가 완료된 전체 투표지를 재검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다량의 개표부정을 하겠다고 누가 마음을 먹을까? 읽으시는 분은 사실과 제 의견을 구분하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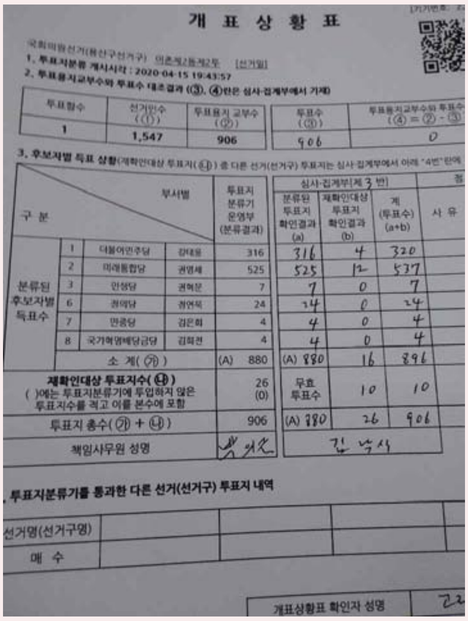
2) 이곳에서 무효표를 육안으로 재분류한다. 개표분류기가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가 생각보다 많다. 같은 칸에 두세 번 찍은 유효표도, 약간의 경계선을 벗어난 표도 유효표다. 상식적으로 분명히 특정후보를 찍었다고 생각되면 유효표다.

3) 개표상황표 작성

(a) 이 표에는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개표분리기 운영부에서 판정한 수치와 심사집계부에서 판정한 수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부서의 책임사무원의 이름이 자필로 쓰여 있다.

(b) 무효표를 재분류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쓰여 있다. (이 경우 선거인과 투표지가 차이가 난다)

용산구 개표소 개표상황표



개 표 상 황 표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2020-04-15 19:43:57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③, ④란은 심사·집계부에서 기재)

투표함수	선거인수 (①)	투표용지 교부수 (②)	투표수 (③)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④=②-③)
1	1,547	906	906	0

3. 후보자별 득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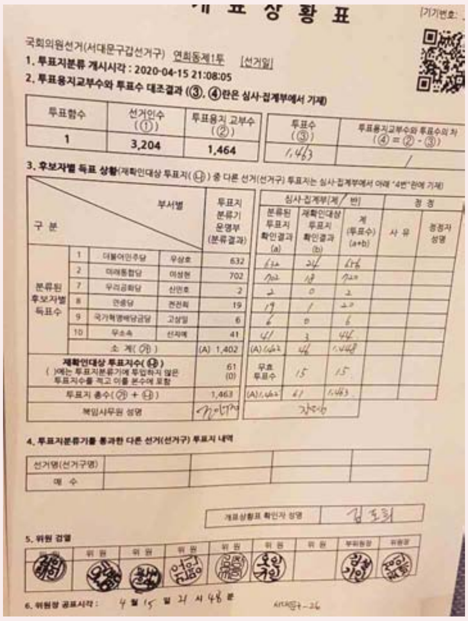
구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분류결과)	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 (a)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 (b)	계 (투표수) (a+b)
1	더불어민주당	[illegible]	316	316	4	320
2	미래통합당	[illegible]	525	525	12	537
3	민생당	[illegible]	7	7	0	7
6	[illegible]	[illegible]	24	24	0	24
7	민중당	[illegible]	4	4	0	4
8	국가혁명배당금당	[illegible]	4	4	0	4
소 계(㉮)			(A) 880	(A) 880	16	896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 )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수를 적고 이를 본수에 포함			26 (0)	무효 투표수	10	10
투표지 총수(㉮+㉯)			906	(A) 880	26	906
책임사무원 성명			[illegible]	김낙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선거명(선거구명)			
매 수			

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

서대문구 개표소 개표상황표



개 표 상 황 표

국회의원선거(서대문구갑선거구) 연희동제1투 [선거일]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2020-04-15 21:08:05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③, ④란은 심사·집계부에서 기재)

투표함수	선거인수 (①)	투표용지 교부수 (②)	투표수 (③)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 (④=②-③)
1	3,204	1,464	1,463	1

3. 후보자별 득표 상황(재확인대상 투표지(㉯) 중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아래 "4번"란에 기재)

구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분류결과)	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 (a)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 (b)	계 (투표수) (a+b)	사유	정정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illegible]	632	[illegible]	24	[illegible]		
2	미래통합당	[illegible]	70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7	우리공화당	[illegible]	2	2	0	2		
8	민중당	[illegible]	19	19	1	20		
9	국가혁명배당금당	[illegible]	6	6	0	6		
10	무소속	[illegible]	41	41	3	44		
소 계(㉮)			(A) 1,402	(A) [illegible]	46	[illegible]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 )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수를 적고 이를 본수에 포함			61 (0)	무효 투표수	15	15		
투표지 총수(㉮+㉯)			1,463	(A) [illegible]	61	1,463		
책임사무원 성명			[illegible]	[illegible]				

4.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선거명(선거구명)			
매 수			

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 김도희

5. 위원 검열

6. 위원장 공표시각 : 4 월 15 일 21 시 48 분

4) 개표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상황표〉와 〈후보별 투표지〉를 함께 담은 투표지 운반 그릇(플라스틱바구니)을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한다. 이때 운반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다.

5. 개표상황표 확인석

개표상황표의 작성이 되었는지, 계수는 올바른지, 하여야 될 서명란에 서명은 되었는지 등 개표상황표의 죽절성(끊김이 일정한가?, 100장씩 잘 묶였는가?)을 확인한다.

6. 위원검열석 및 위원장석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를 검열하고,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7. 보고석

1)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를 입력 보고한 후,

2)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 (요청 시)

3) 개표결과를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도 부착·공개한다.

기록·보고석

☆ 개표상황표 확인석, 위원검열석, 보고석 등의 위치와 사람들을 확인하였으나, 그들이 조작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며,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하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보고석에서 조작 입력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유는 제도적으로 언론사와 참관인이 요구하면 개표상황표를 제공하고, 또한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는데, 도하에서 보고자가 서류조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각 정당 참관인들이 한 개의 투표함이 개표 완료 될 때마다 합산하면서 당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참관인들이 게시판에 공고된 개표상황표를 사진 촬영함과 동시에 일부는 실시간으로 카톡방에 올리고 있다.

8. 비례대표 정당투표와 심사집계

▷ 지역후보 투표와 달리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당 투표는 당의 수효가 많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길어 개표분리기로 분류할 수 없어서 소위 말하는 수개표로 하였다.

▷ 지역투표지의 개표와 비례대표투표지의 개표와의 차이는 개표분리기를 사용하느냐 않느냐의 차이 뿐이고 그 이하는 동일하다. 즉 당별로 득표한 투표지를 기기가 하지 않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당별로 가느다란 고무줄로 묶음으로 그릇(플라스틱바구니)에 담는다. 이하 개표 과정은 지역후보 개표와 동일하다.

☆ 그래서 비례대표에 대한 개표조작은 어렵고 지역후보 개표에서는 개표조작이 쉽다는 주장에 대하여,

> 만약 투표분리기를 조작한 자가 비례대표 개표 과정 중에 투표지 분류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개표분류기 역할) 누구 감시도 덜 받고 기기조작에 대한 증거도 남지 않으며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당, B당 각각의 표를 분리하다가 감시의 눈만 피하여 B당 표를 A당 표 위에 놓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참관인들이 제대로 잘 분류하는지 어떤지 관심이 개표분류기에 비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기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므로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어 감시하여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투표지 심사계수기에서 확인하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분류 조작이 더욱 수월하다.

- 비례대표의 개표는 분류만 사람이 하였지, 최종 당별 득표한 투표지의 분류의 정확성과 표의 계산은 지역후보자 개표와 같이 투표지심사계수

기를 사용하였다.

- 따라서 두 가지 개표방식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개표방식이다. 비례대표 개표는 조작이 어렵고, 지역선거 개표는 조작이 쉽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종로구 개표소 비례대표 투표용지 손으로 분류중 (수개표)

서대문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손으로 분류 후 심사계수기 작동중

▷ 사전투표 투표장에서 보니까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투표자 중에 2장의 투표지에서 날인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었으며, '왜 한 장에는 1번, 2번의 난(칸)이 없느냐?', '이렇게 많은 당에서 무슨 당을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이 없다'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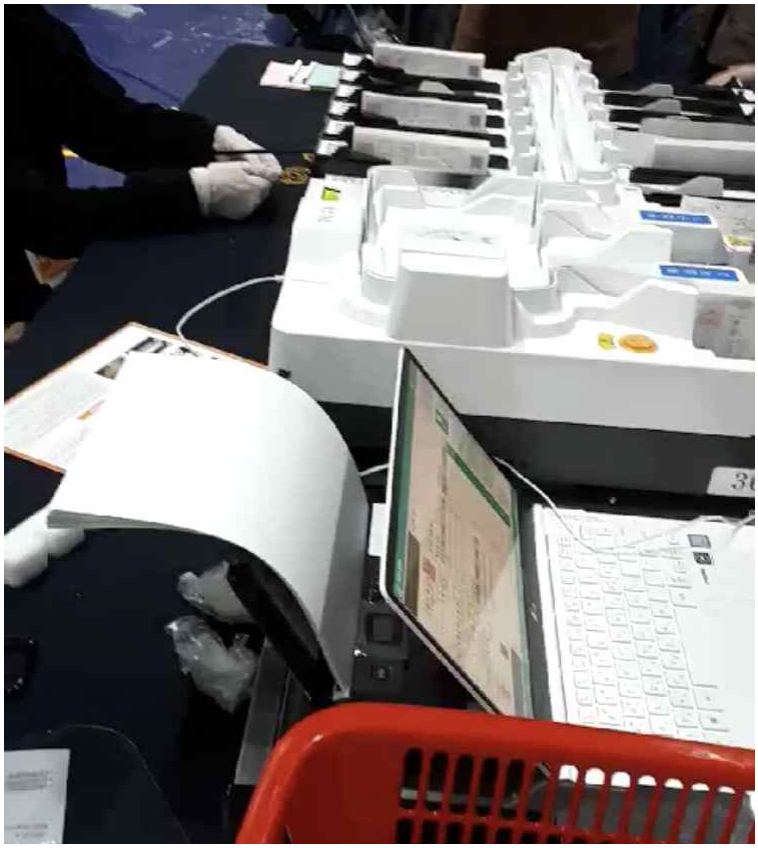
▷ 한편 개표장에서 보면 실제로 비례대표 투표지에 여러 곳을 찍거나, 한 곳도 찍지 않은 표가 지역대표의 표에서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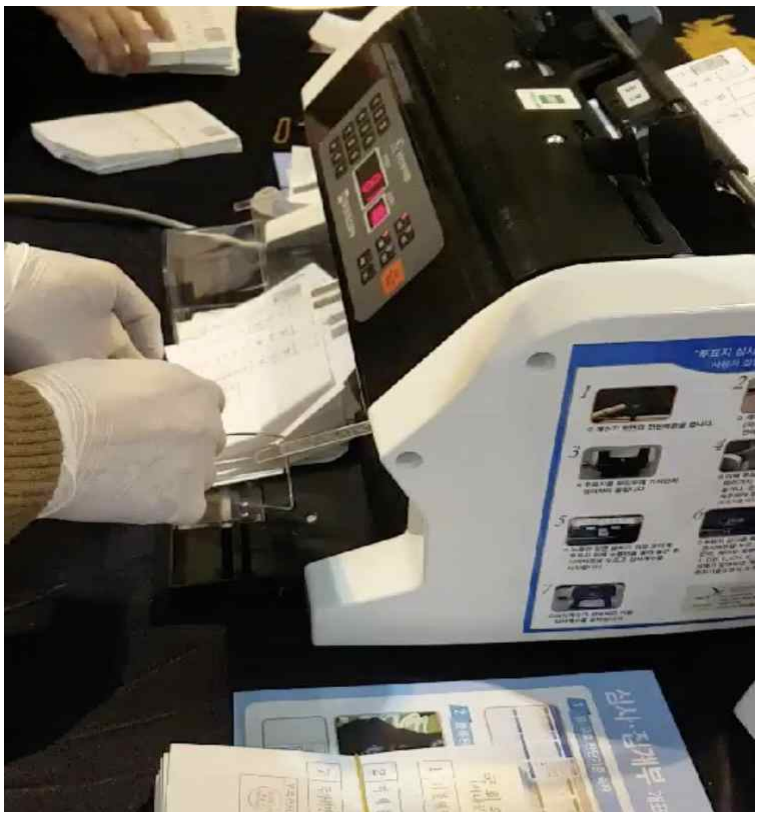
☆ 특이한 현상: 실제 눈으로 본, 믿지 못할 사실

- 한 명이 지역후보와 비례대표를 찍은 표에서(큰 투표지 속에서 나온 작은 투표지) 하나는 민주당을 하나는 한국당을 찍은 표가 내가 본 사례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있었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네! 하며 유심히 보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하여 보았지만, 그 내용은 추론이므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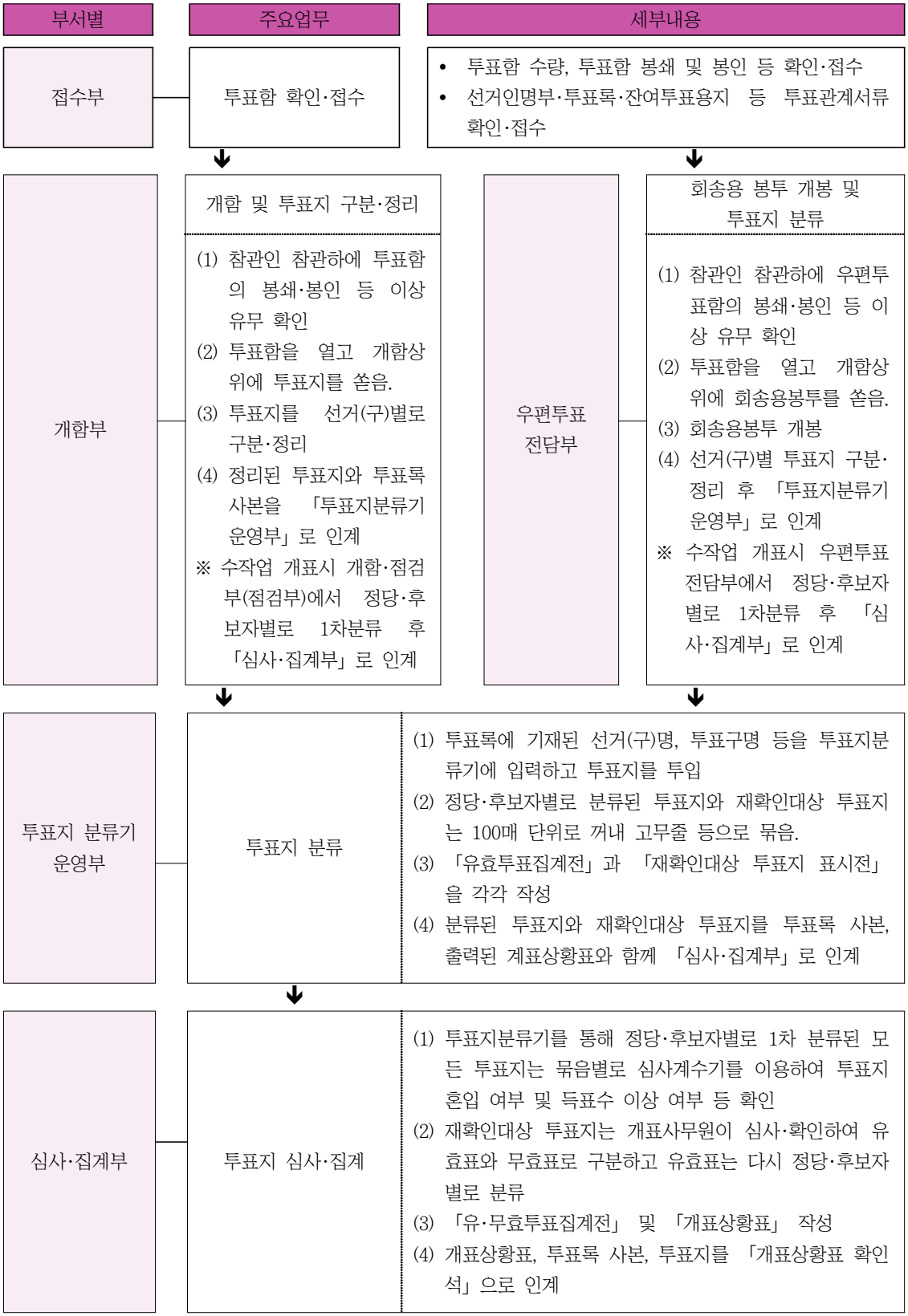
☆ 추가: <u>개표장의 개표업무</u>

- [개함 ⇨ 투표지 정리 ⇨ 개표분리기 ⇨ 투표지심사계수기 ⇨ 집계부 ⇨ 개표상황표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병렬로 각각 4개조와 관외 투표지를 담당하는 1개조, 도합 5개조가 있으며. 각 조 앞에 그 조가 개표하여야 할 개표함 4~5개(투표지 수량을 고려하여 배분)가 놓여있다.
  - 각 조별로 한 개의 함 씩 4개함이 동시에 개표를 진행한다.
  - 봉투로 배달되어온 관외 투표함은 별도조가 담당.
-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투표함은 앞에 쌓여있으며, 그러한 투표함의 봉쇄(봉인핀) 및 봉인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시간은 많다. 언제나 자유로이 하면 된다. 많은 개표소에서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에 개함하며, 이러한 개표소는 사전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6시간 이상 충분하다.





※ 주요 개표절차 　　중앙 선관위 제공



개표상황표 확인석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1)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계수의 정확성 여부, 정정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등 확인 (2) 개표상황표, 투표록 사본,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위원 검열석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1) 출석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 (2)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3) 위원장 공표 후 개표상황표, 투표록 사본, 투표지를 「보고석」으로 인계
보고석	개표상황 보고	(1) 공표된 개표상황 입력·보고 (2)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 개표상황표 사본 부착·공개 (3) 언론사, 개표참관인 등에 개표집계상황표 출력제공 (4) 투표지를 「정리부」로 인계
정리부	투표지 포장·정리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 등으로 투표지 보관상자(보관봉투 등)에 넣고 봉함 후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

종로구 개표장

라. 통합명부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

(1)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에 사용하기위해 지자체에서 확정.

(2) 외국인투표권 문제와 혼동: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의 투표권 차이, 투표권자의 권리 차이 등에 대한 혼선이 있었음.

-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즉, 한국국적을 갖고 외국에 영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함. 조선족은 중국인으로 재외국민이 아님.
- 따라서 조선족은 국회의원 선출권이 없음. 단, 이들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참정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공선법 제15조제2항 3호)
-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필요. (편집자)

(3) 통합명부시스템 대용량 서버의 임차에 관한 보안 등에 관한 실효적 감시 필요.

공직선거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 1. 17., 2014. 1. 17.〉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

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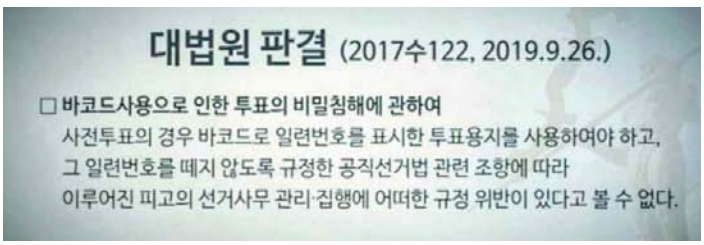
마. QR코드 문제

(1)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 용지는 무효인가?

- 성동구 선관위의 답변은 2014년 1월에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넣어야 할 내용의 용량이 커서 한 번도 바코드를 사용한 적인 없으며, QR코드 안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투표소명, 일련번호 4가지만 넣는다고 하였음.
- 그 이유는 법안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음.
- 이 법안은 2014년 1월에 신설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음. (편집자)

(2) 바코드 (또는 QR코드) 사용이 비밀투표원칙 침해인가?

- QR코드 안에 선거의 비밀투표원칙을 훼손하는 개인정보가 담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만일에 그러한 정보가 담긴다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음.
- 이 문제는 2017년 김재홍(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대표)가 제기한 대선 무효소송 중 대법원의 판단 대상 중 하나였음. 원고 측은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하여 제3자가 특정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사무를 관리·집행하였다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표시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음.
- 관련 법조항인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이 2014년 신설된 이후 실시된 3회의 사전투표에서 모두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사용되었음. QR코드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는 것임. 선관위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판결 내용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를 잠정 인정한 결론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QR코드를 기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편집자)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인계시의 각 감시인들의 역할

(1) 각 절차상 봉인을 할 때와 봉인상태의 투표함이 인계될 때, 확인할 사람, 장치, 절차가 없음.

서대문구 선관위에 보관중인 관외사전투표함

※ 관외 사전투표 투표지 인계

(김지수 님 (경기 용인) 자료, 4/14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선관위에서 조 교대 후, 그 다음에 들어온 우체국 배달 차. 감시하는 사람 동승 않고 우체국 직원만. 그 귀한 사전투표 한 것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고 충격 먹으며 제가 직접 감시 하는 척이라도 했지요.. 우리가 밤새도록 건물 밖에서 지킨 사전투표 한 것을 이렇게 덩그라니... 우체국 직원 달랑 두 명이 와서 옮겨 놓길래,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우체국 택배가 사전투표한 것을 정리한 소쿠리 같은 것을 갖고 용인선관위로 가지고 와 옮겨 놓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택배 배달 같았어요.

※ 황영근 님 (종로구) 보고

종로·중구 선관위에서 놀랬던 점은, 1층에 사전투표함이 일부 보관되어있다는데, 제가 있었던 3시간 여 동안 텅 비워놓고. 한 10~20분정도 1층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 같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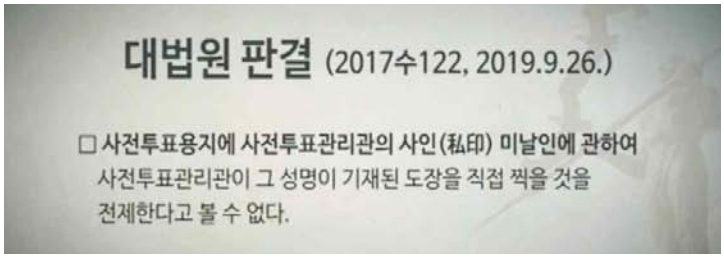
사. 투표용지 인쇄, 날인 문제

(1) 선거일투표시, 투표지 하단 투표관리인 날인란에 관리자날인이 없는 경우와 미리 날인을 찍어놓은 경우가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 선거일 투표는 인쇄된 것을 사용. 날인이 없다면 무효임.
- 편의상 미리 날인을 찍어놓는 것은 문제가 없음.

(2) 사전투표는 즉시 출력함.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인쇄하고 있음. 이것은 위법인가?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3) 사전투표용지 등기봉투가 해당선관위에 보관되었다가 개표장으로 가서 개표될 때,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해당 선관위로 들어오는

① 관외 사전투표 등기우편의 QR코드 일련번호, 유권자 서류의 일치와,

② 봉투의 개수를 맞추어보는 정확한 작업이 전개되었나?

아. CCTV 설치, 투표함이 아닌 행낭 사용 등에 대한 규정 미비

명시된 법규정은 없으나, 편의에 의해 발달되어온 선관위 내부 시스템임.

자. 투표 시스템, 통신과 프로그램 문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사용

(1)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공인을 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

(2) 투표지분류기와 심사분류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

차. 투표참관: 정당투표참관인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 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④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개정 2005. 8. 4.〉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⑨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 미래통합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정당투표참관인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 미래통합당이 정당투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미래통합당은 정당투표참관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편집자)

카. 개표참관

1) 개표참관인: 선관위 개표참관인, 정당 개표참관인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8. 4.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4. 3. 12., 2005. 8. 4.. 2012. 1. 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⑥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5. 8. 13.〉

※ 미래통합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정당개표참관인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 미래통합당이 정당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미래통합당은 정당개표참관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편집자)

2) 일반 개표관람

※ 4/15 종로구 개표장 황영근 님 (종로구) 보고

참관인 활동을 정식으로 안하고, 종로·중구선관위에 오후3시쯤에 가서 공정연 분들 3명과 사전투표함 감시 좀 하고, 6시에 투표함 이송 쫓아 종로개표소로 가서 밤 12시 쯤 결판 날 때까지 강당2층에서 감시 좀 했죠. 정식 참관인 아래층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위에서 관찰하니 더 보기는 좋더군요. 처음부터 종로는 황대표가 질 걸로 보아서인지, 종로선관위의 사람도 오후 5시 돼서야 2~3명 보이고, 텅 비어 있었어요. 아쉽더군요. 사전투표함 지키는 사람도 안보이고.

공직선거법 제182조(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타. 투표소에서의 투표자 촬영과 참관인 촬영

(1)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자기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것은 위법, 즉시 무효표가 됨.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 1. 17.〉 [본조신설 2010. 1. 25.]

(2) 정당투표참관인의 촬영은 각자의 판단 하에 사고를 규정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도 됨.

파. 활동 중 발생한 이상상황

1) 사전투표함 이송은 안전한가?

상암 투표소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윤도원 님, 마포구)

의문점: 1. 투표 완료 후 투표함 이송차량은 사안의 무게와 긴급성에 의해,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을 실으면 곧바로 선관위로 직행했어야 했다. 선관위는 운전자의 운송 매뉴얼이 있나?

2. 운송차에는 경찰과 참관인이 동승했는가?

3. 어째서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서서 숨바꼭질하듯이 복잡한 운행 기록을 남기게 되었나?

4. 선관위는 투표함을 실은 차가 곧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운송 매뉴얼을 제시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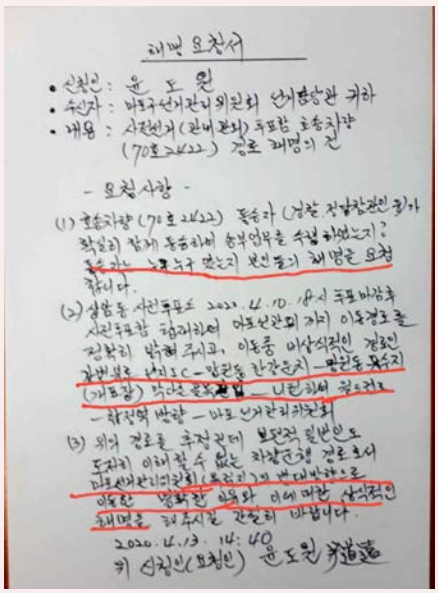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감시활동 보고서 윤도원 님 (마포구)

(1) 사전투표소 (상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함 이송과정 (2020. 4.10, 18:30경 출발)

- 수송차량 No 70호2422 (스타렉스 검정색)
- 2020. 4.10, 18:45 성산대교 아래서 망원동 고수부지(우측)로 내려감.
- 2020. 4.10, 18:46 고수부지에서 로타리회전 망원동 방향
- 강변북로 F터널 진입 ⇨ 죄회전 ⇨ 좌회전
- 2020. 4.10, 18:48, 망원유수지 골목(입구) 진입.
- 일시멈춤 ⇨ 180도 회전하여 도로 나옴.
- 망원시장 쪽으로 우회전 ⇨ 좌회전
- 월드컵로 망원역 2번 출구 지나 합정로타리
- 광흥창역 ⇨ 대흥역 ⇨ 이대방향 ⇨ 우회전 ⇨ 우회전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2020. 4.10, 19:16 도착.
- 투표함 이송차는 2020. 4.10, 19:00경 도착 추정.
- 광흥창역까지는 추적했으나 이후 교통혼잡으로 놓침

- 이송차량(70호2422 스타렉스)은 4.10, 19:50경 나갔음.
- 블랙박스(차량) 추적방향과 시간 녹화됨 (2020. 4.10, 18:45~18:52 이후.

이상한 동선 (망원 유수지 체육관 개표장 진입: 해명요청서를 4월 13일 마포선관위에 제출.



(2) **《해명요청서》**

신청인: 윤도원

수신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귀하

내용: 사전선거(관내·관외)투표함 호송차량 (70호2422) 경로 해명의 건

- 요청사항 -

- 호송차량(70호2422) 동승자(경찰, 정당참관인 등)가 확실히 함께 동승하여 송부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동승자는 누구누구였는지 본인들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 상암동 사전투표소 2020. 4.10, 18시 투표마감후 사전투표함 탑재하여 마포선관위까지 이동경로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동중 비상식적인 경로인 강변북로 난지IC—망원동 한강둔치—망원동 유수지(개표장) 막다른 골목진입—U턴하여 월드컵로 합정역방향—마포 선거관리위원회
- 위의 경로를 추정컨대 보편적 일반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량운행

경로로서 마포 선거관리위원회(목적지)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명확한 이유와 이에 대한 상식적인 해명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 4.13, 14:40
위 신청인(요청인) 윤도원

2) 선관위가 보관하지 않는 부재자 투표함이 있나? (서대문구 선관위, 원선자, 정유순, 최종협 님 보고)

※ 투표함이 선관위 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표장으로 따로 도착한 경우

발생 시각: 4/15, 오후 6;30경

당일 투표가 모두 끝난 시점, 우리 공명선거 지원단 서대문 팀(최종협, 정유순, 원선자 님)은 서대문 선관위 4층에서 투표함 이송을 모두 확인함. 그동안 서대문 선관위 직원들이 설명도 해주고, 함께 엘리베이터로 이송 과정을 지켜봄. 그때, 정당 참관인도 다 있었고, 우리 팀도 다 보고 있었음.

투표함을 탑차에 싣고, 정당 참관인이 그 차에 2명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스로 출발. 우리팀 사람들은 승용차로 출발하여 명지대 개표장으로 갔음.

우리 팀의 임무는 보관 확인, 이송 확인이었으므로, 명지대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실은 탑차가 도착, 투표함이 모두 내려져서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미션이 끝났음을 기뻐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음. (최종협 님은 선관위 이날 4층 이송 과정을 통해 관내, 관외 투표함의 형태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함.)

운동장에는 검은색 스타렉스 똑같은 차 2대가 나란히 서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또 검은색 스타렉스 1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와 나란히 섰음. 원선자 님은 이상해서 그 차들로 접근했고, 최종협 님은 이 모습을 약간 멀리서 보았음.

운동장에 똑같은 검은 스타렉스 세 대가 나란히 섰고, 그중 한 대에서 여자 1명, 남자 2명이 내렸으며, 선관위 명찰이 없었음.

원선자 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그들 중 한명이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말했음. 이들은 운동장에서 차문을 열고 관외 투표함 한 통을 땅에 내렸다가, “어디로 갖고 가냐”고 묻자, 다시 급하게 싣고 “입구를 잘못 왔다”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음

목격자 원선자 님은 차 안에 흰색 투표함 단 한 통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미 서대문 선관위에서 모든 사전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송 완료된 터라, 미션이 끝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예상치 못함. 지하주차장 CCTV 공개를 요구해야 함."

※ 논의할 점

(1) "동사무소"에서 선관위 보관을 거치지 않은 투표함이 개표 당일에 올 수 있나?

- "동사무소"라는 단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음. 현재는 "주민센터"임.
-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라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음. 그래서 이틀 후 4/17에 보고했으나, 사진 등 증거가 없음. CCTV 공개를 위해서는 사진 등 증거 자료가 필요. (편집자)

(2) 이는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용역직원들이 15일 당일개표 시까지, 투표함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그 투표함 봉인에 정당참관인의 참관여부가 불명이며,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함. 선관위가 보관하지 않은, 선관위의 봉인을 직접 거치지 않은 투표함이 있는 것임.

- 거소투표 투표함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소투표 투표함도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봉인과정을 거쳐야 함. 따라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음. (편집자)

※ 이런 일에 대비하여 운송 차량이 완전히 도착·하역한 이후에도 다른 함의 도착이 없는지 확인해야함. 다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즉각 해당 장소의 CCTV 공개를 요구해야 함. (편집자)

3) 선거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직원 행동 매뉴얼 유무

(서대문 선관위, 최홍균, 원선자, 박태수 님 보고)

※ 4/10 야간 북가좌2동 사전투표소 공명선거지원단 긴급보고

박태수 님 (서대문구)

- 장소명: KT가좌지사

- 경비실 직원 낮12시부터 근무 눈 충혈 수상

- 우체국 탑차 하루 두 번 나가는데 7시 반에 나감
- 흰색미니밴 10시 35분 나감
- 검은색 승용차11시경 나감. 차량번호는 경비 K씨 녹음파일에 있음.

▪ 상황발생 및 검거과정.

- 밤10시 45분경 직원이라는 키가 좀 큰 사람 빈손으로 들어가서 20분쯤 후 두툼한 가방 들고 나온걸 보고 공명선거감시단 위원임을 밝히고 당신 누구냐고 검문하니 KT 직원인데 물건을 두고 나와서 사무실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라고 함. 수상해서 추적하니 길 건너 리베라 모텔로 들어감. 직원이 모텔에 들어가는 게 수상함. 경비 K씨에게 A로 이름 확인. (잠시 후 경찰 경위 B가 재확인)
- 북가좌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관 대동하여 모텔에 들어가서 신분 확인했음. KT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밤11시 경 전화국 건물 안에 들어가서 두툼한 가방을 들고 나온 선관위 직원 A이라는 사실을 경찰관 B경위 앞에서 확인했음.

※ 이에 대해 4/11 오전 7:35분 경 서대문 선관위 사무국장의 해명 전화를 받았음.

- 총선이라는 예민한 시기에 해당 선관위 직원의 부적절한 장소와 시간,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음. 해당 직원의 집이 너무 멀어 사전투표 이틀간(1박)을 근처 모텔에서 숙박했고, 늦은 시간 개인소지품을 놓고 나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명했음. 신원에 대해 거짓할한데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이라고 대답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어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사무국장이 해명했음. 불룩한 가방 속에는 본인의 소지품과 개인 물병이 들어있었다고 해명했음.

※ 문제점

1. 선관위 직원의 부적절한 장소, 시각, 태도(주변을 두리번거림.)
2. 신분 거짓진술
3. 가방 문제(빈손으로 들어갔다 불룩한 가방을 가지고 나옴.)
4. 관리인의 음주와 직원 비호 문제
5. 선관위가 소등 후의 직원 출입에 대한 매뉴얼 유무 확인
6. 밤 11:05 에 선관위로 들어간 직원의 출입 기록이 있나?
7. 해당 직원의 당일 행동이 서대문 선관위 사무국장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문제

가 있다고 말했음. 이런 문제행동을 방지할 직원행동 매뉴얼이 있는가?

8.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지원단 서대문 팀이 북가좌파출소에 신고했음. 경찰 출동.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일이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편집자)

4) 사전 투표 후 선관위에서의 분리작업 (서대문 선관위, 원선자 님)

4/12(일) 사전투표 종료 후, 서대문 선관위에서 정당참관인 없이 사전투표함을 쏟아서 사전투표 우편봉투 분리작업을 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2. 13.〉
>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논의할 점

(1) 공선법 제158조 제6항 1호에도 불구하고, 관외라도 같은 지역, 예를 들어 서대문갑 지역에서 관외로 서대문을 지역 투표봉투가 있을 때는 우체국에 인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됨.

(2) 관외투표 등기우편물은 반드시 정당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여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그런데 토요일 사전투표가 완료되어 정당 투표 참관인으로부터 투표함과 개수를 확인 받았다면, 당일이 아니라도, 다음날 일요일에 선관위가 참관인 없이 분리할 수 있겠음. 투표봉투 수 계산을 당일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임. (편집자, 윤도원 님)

5) 허술한 개표장 준비 상황 (종로구 선관위, 황영근 님)

※ 황영근 님 (종로구) 보고

1) 종로·중구선관위에서 놀랬던 점은 1층에 사전투표함이 일부 보관되어있다는데 제가 있었던 3시간여 동안 텅 비워놓고 한10~20분 정도 1층에서 자리를 지키던 것 같더군요.

2) 공정연분이 감시를 위해 미통당 추천 통해 와서 그렇지 실제 미통당 인사는 사전투표함의 이송을 지켜보기 위해 전혀 없는 것 같더군요.

물론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개표장에는 당참관인이 여러분들 나와 있었지만 그렇게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이송을 민간단체에서 이야기해도 남의 일로 보는 것 같더군요. 왜 황대표는 사전투표하라고 권장하고 사전투표에서 보관 이송에 관심도 안가지고 그 많은 차이로 져버렸는지 궁금하네요.

3) 이송을 위해 5시쯤 종로와 중구의 개표소로 가기위해 트럭 2대와 버스 2대와 경찰차 2대가 왔지만 빈 버스에 감시하는 사람은 타지도 못하게 하니 쫓아가느라 택시 잡느라 지체하고 제대로 감시도 안되더군요.

물론 그 시간에 뭘 할리는 없겠지만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군요.

4) 선관위 쓰레기장에는 사전투표 첫날의 청운동, 삼청동등의 박스가 나뒹굴던데 숫자는 사전투표 당일의 참여한 사람숫자가 쓰여 있는 것은 맞게 확인했으나 5일이 지나도록 박스가 치워지지도 않고 선관위 쓰레기장에 쌓여있는 것도 우체국과 연관지어 뭐하다 와서 당시까지 거기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더군요.

5) 부정선거시비가 일어도 민간인이 고발을 하고 후보자는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일부 후보자는 그런 민간인을 고발한다 하고, 도대체 해외토픽감이지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 맞는지도 의문이더군요.

또 당대표란 사람이 나온 선거구에서, 이송을 쫓는다고 나선 사람들 몇 명이 당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멀리 편의점 왔다 갔다 하며 지키다가, 택시타고 보관함 쫓는다는 게 참 자괴감도 들고, 미통당이란 곳이 수권능력과 의지나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하. 투표함 이송 시의 허술한 보관 절차

(1) 사전투표(특히 관외투표)와 부재자투표(재외국민, 거소, 선상투표)의 전 과정을 통틀어 봉인의 신뢰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음.

- 한 번 봉인하면, 그 다음 상황에 봉인이 그대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감시원의 본인확인 절차나 확인 시스템이 없음.
- 봉인된 투표함이 안전하게 개표장에 이송될 때까지의 5일간 릴레이식으로 연결된 보관확인제도가 없음.

(2) 봉인지와 잠금핀이 일회용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떼고 다시 붙이는 조작의 위험이 상존. 떼고 잘라도 흔적이 남지 않음. 만일 정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봉인지 서명을 여분으로 더 쓰게 한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음.

- 관외 투표함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는 5일간, 매번 참관인들이 철저한 감시하에 봉인을 떼고 새로 붙이는지, 새 봉인에는 기존 서명과 연속성이 있는 새 서명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없음.

거. 개표장에서의 실수 및 기강헤이

※ 서대문구 개표참관인 스케치 최홍균 (서대문구)

1. 들어가기

사전투표의 부적절한 선관위 직원의 돌발 행동에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우여곡절 끝에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여 개표장 이곳 저곳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남기겠다는 각오로 4시 20분 전에 개표참관인 등록을 마쳤다.

2. 진행 과정

2.1 참관인 통보 절차 의문점

여당 개표참관인은 최대 인원 13명, 야당은 5명, 기독자유통일당 3명, 눈에 띄는 참관인으로는 홍익당 다수, 녹색당 다수와 일반참관인 5명 등 총 83명 등록 되었으나, 실제 연락을 받지 못하여 불참자들도 있을 추측한다.

왜냐하면 기독자유통일당은 1명으로 알았으나, 당일 확인한 결과 명단에는기독자유통일당 3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 분은 자유당으로 등록되었다고 알고 오셨으나 현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되어 참가한 공지단 회원 이혜숙님, 참관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연락하여 5시 30분 넘어서 참가하신 홍애숙님 등 모두 3명이었기 때문이다.

개표 전부터 불명확한 참관인 소속 및 통보로 혼란스러웠다.

2.2 투표함 도착 실수

모든 투표함은 명지 중학교 쪽 체육관 문으로 운송되었다.

사전선거함은 북가좌동 선관위에서 개표장으로 운송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자고 회원들과 사전 약속하여 차량을 미행하여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개표장 도착 직후 회원들은 우연히 다른 투표함 운송의 이상한 점을 목격하였다.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송된 투표함은 검정색 옷을 입은 3명이 출입구를 잘 못 찾아왔다고 하며 정문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사후에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차량의 사진 촬영도 찍지 못했다.

2.3 투표지분류기 작동 불량

관내사전 투표함 개함으로 시작된 개표는 개함점검부에서 투표지가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당, 보궐선거 등으로 1차 분류되어 다음 단계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가 계수되었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선관위 직원이 수리하였고, 개표사무원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다독거렸다. 즉 체육관에 설치된 6대 이외 예비기 1대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듯 했다.

2.4 개표과정

사전선거 투표함부터 개표시작을 한다고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래서 사전투표함 개표가 모두 끝나고, 선거일 개함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사전선거 개함은 개함점검부에서 투표지가 개략적으로 분류되어 6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선거일 투표소 개함은 개함부로 분류되어 1~5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개함부터 종료 공표 시간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100장씩 분류되어 심사집계부에서 무효표를 집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 40~90분 소요되었고, 비례당 투표지는 50장씩 분류되어 약 80~150분 등, 개표 사무원 숙련도, 개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되었다.

2.5 개표상황표 게제

예상보다 늦게 19:30 넘어서 개표가 진행되어, 21시가 되자 개표장 벽면에 개표상황표가 게재되었다. 소중한 기록이라 사진촬영부터 하였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투표용지 배포 수와 투표지 수의 확인을 현장에서 하지 못했다. 차후에 확인 한 바, 투표용지 배포 수가 더 나온 곳이 2곳(신촌동, 홍은 2동), 덜 나온 곳이 2곳(북가좌1동, 홍제2동), 보궐선거 용지 혼입되어 개표상황표가 틀리고 투표지가 덜 나온 1곳(남가좌2동)

- 4,790(분류기 용지수) - 15(보궐선거) = 4,755(함내 투표용지수)
- 4,768(투표인수) - 12(투표용지 부족수) = 4,755(함내 투표용지수)
  〈마지막 투표함은 투표지가 12장이 부족한 심각한 오류 상황이다〉

2.6 서대문 선관위 개표 종료 허위 공표 및 귀가 방송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선관위는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 개표 사무원, 참관인에게 귀가 방송을 하였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려고 3시 30분까지 기다렸다. 계속 귀가 방송이 나와서 최수영 계장에게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에서 2시에 일괄적으로 공표하니까 그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줄 알고 참관인 3명이 마지못해 귀가했다.

이후 개표상황표를 촬영하지 못해서, 서대문구 전체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다. 무척 아쉽다. 이후 타 선관위는 16시간 지나서까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개표종료를 지켜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2.7 관외 사전 투표지 절취

관외 사전투표지, 거소자투표지, 선상투표지는 봉투를 절취하는 기계가 있는데,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가 절단기에 잘리지 않도록 봉투를 잡고 봉투 절단부와 투표지를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리되지 않아서 칼날에 일부 파손되는 일이 있어서 무효처리 되었다.

너.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 양천구 차대욱 님 질문

밤에는 선관위가 있는 건물 밖에서만 감시활동을 하므로 간밤에 투표함이 바뀌치기 또는 부정표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또는 투

표함이 보관장소에 입고되기 전에, 사진촬영(참관인서명 봉인지)을 해서 전날과 대비하여 온전한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동행한 참관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선관위직원들은 받아주지 않고 원칙대로 정당에서 신청해야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68조에 의하면 (사전)투표 첫째날 투표가 끝나면 (정당)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관할 선관위 또는 사전투표소에 보관됨. 사전투표 둘째날에는 정당투표참관인이 봉인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 제거 후 사용함. 사전투표 마감 후 봉쇄·봉인하고 관할 선관위에 이관된 후,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때까지 보관소에서 봉인상태를 유지함. 보관소에는 전용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정당투표참관인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의 회원이 봉인을 포함한 보관상황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 가능.

(2)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함의 경우, 등기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정당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개수를 세고 다시 봉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용 CCTV도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대문구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음) 정당투표참관인의 출입도 불가능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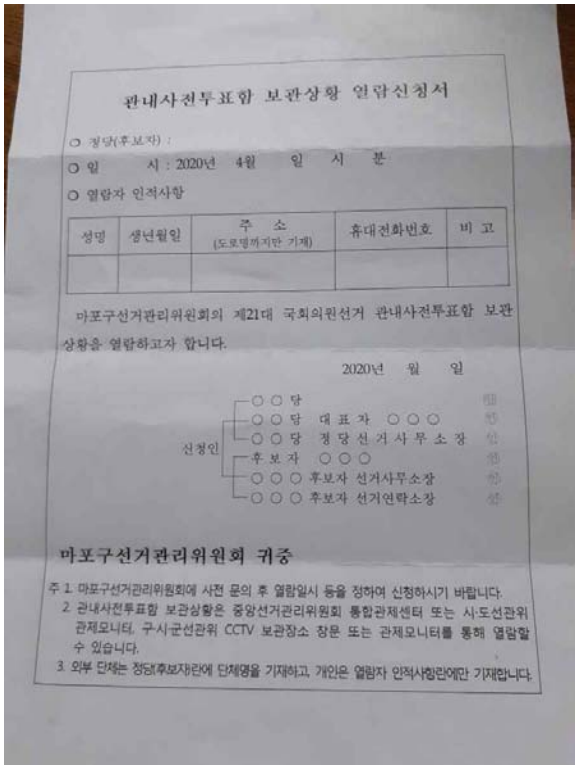
- 관외 사전투표함은 현재로서는 정당투표참관인이 아닌 한 열람 불가.

결국, 정당투표참관인 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회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또한 봉인의 연속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편집자)

더. 주의할 점

(1) 공식선거기간 중(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선거법위반 감시단)과의 충돌 유의.

-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앙 및 각급 선관위가 위촉.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열람신청서

○ 정당(후보자) :
○ 일 시 : 2020년 4월 일 시 분
○ 열람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까지만 기재)	휴대전화번호	비 고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당 (인)
○○당 대표자 ○○○ (인)
○○당 정당선거사무소장 (인)
후보자 ○○○ (인)
○○○ 후보자 선거사무소장 (인)
○○○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인)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 후 열람일시 등을 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 관제모니터, 구시군선관위 CCTV 보관장소 창문 또는 관제모니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단체는 정당(후보자)란에 단체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열람자 인적사항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회단체인 공명선거지원단 (고유번호: 768-80-01373)은 공직선거법 제10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단체이므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삭제 〈2005. 8. 4.〉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 각급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과 법적 보호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2., 2014. 1. 17., 2018. 4. 6.〉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개정 2005. 8. 4.〉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개정 2005. 8. 4.〉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7.〉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17.〉

러. 정보공개 요구

(1) 선거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보 공개가 필요하면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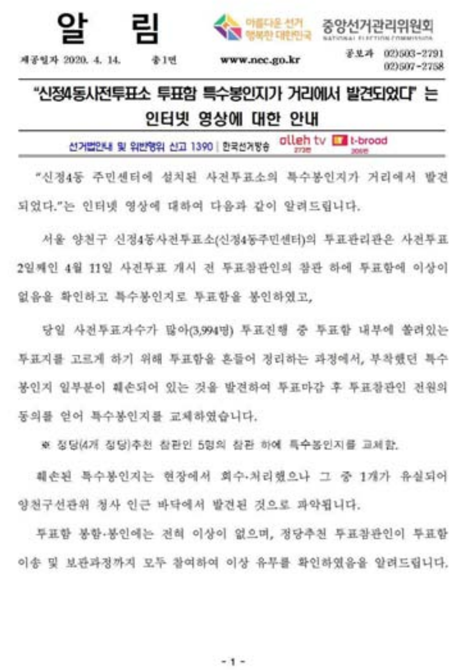
- 선거, 투표 관련 이상 상태가 발견되는 즉시 선관위 1339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 선관위 정보공개의 예: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인터넷 영상에 대한 안내. (2020. 4. 14.)

"신정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인터넷 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신정4동주민센터)의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2일째인 4월 11일 사전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수봉인지로 투표함을 봉인하였고, 당일 사전투표자수가 많아(3,994명) 투표진행 중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착했던 특수봉인지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특수봉인지를 교체하였습니다.



알 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0. 4. 14. 총1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 는 인터넷 영상에 대한 안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olleh tv t-broad

"신정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인터넷 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신정4동주민센터)의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2일째인 4월 11일 사전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수봉인지로 투표함을 봉인하였고,

당일 사전투표자수가 많아(3,994명) 투표진행 중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착했던 특수봉인지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특수봉인지를 교체하였습니다.

※ 정당(4개 정당)추천 참관인 5명의 참관 하에 특수봉인지를 교체함.

훼손된 특수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처리했으나 그 중 1개가 유실되어 양천구선관위 청사 인근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표함 봉함·봉인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 정당(4개 정당)추천 참관인 5명의 참관 하에 특수봉인지를 교체함.

훼손된 특수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처리했으나 그 중 1개가 유실되어 양천구선관위 청사 인근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표함 봉함·봉인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투표 관련 이상 상태가 발견되는 즉시 선관위 1339로 신고하고,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신청

▪ 웹 신청 (http://open.nec.go.kr/Main)

▪ 문서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형태	[ ]N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 수 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 수 증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

유 의 사 항

1.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속기관의 경우 "○ ○ ○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개표참관
개표참관

5. 성 과

(1) 처음으로 경험해본 보수 우파 유권자 운동.

(2) 처음으로 경험해본 생활 속의 정치와 선거 제도.

(3) 사전투표 제도의 허술함 인식. 제도 자체의 고비용 구조와 포퓰리즘 이해.
이송, 보관 등 절차적 허술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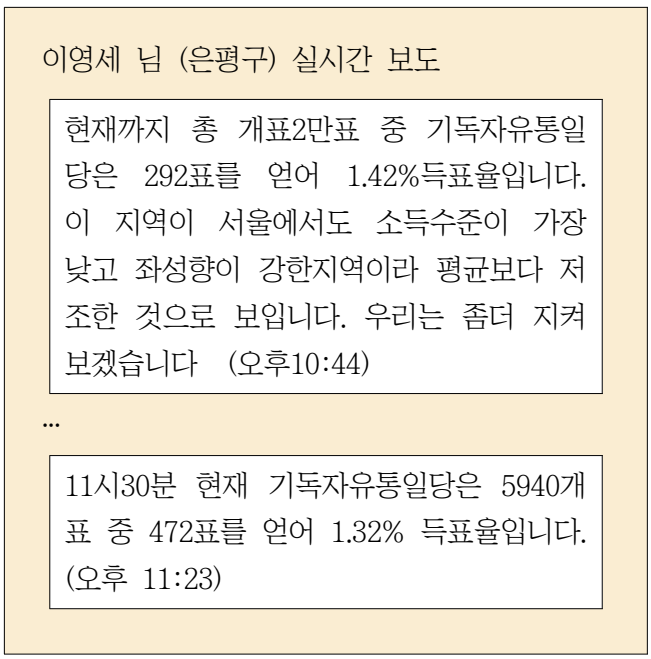
(4) 주요 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공부하고, 행동하는 우파 유권자 조직 구성.

(5) 앞으로 선거 국면이 왔을 때 사용할 매뉴얼 확보.

(6)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대두와 소그룹 확산.

(예) - 강소향 님(종로구)이 하남시에 그룹을 형성, 하남시 총선감시활동
- 김지수 님(용인수지)이 용인수지에 그룹을 형성, 총선감시활동

(7) 회원들의 개표참관 활동으로 방송보다 더 빠른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짐.



사전투표 NO!
당일투표 YES

6. 회원 후기

가. 유경호 님 (서대문구)

공명선거 지원단 여러분들의 분투로 문정부의 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선거의 득표 비율은 유권자들의 지지와 비례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거 비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1대 총선거에서는 사전선거와 본선거로 나누어졌고, 사전선거도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누어져서 선거 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특징은 여와 야의 득표 비율이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비율이 비슷해야 할 터인데, 사전투표 비율과 본 투표 비율의 차이가 심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이므로 투표함 보전 신청과 재검표에 의해 부정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끝나야, 우리들의 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 이혜숙 님 (서대문구)

공정연, 자유시민본부 활동 소감

2019년 10월부터 청와대 광야교회, 순국결사대로 지원 활동하다가, 이 나라가 주사파정권의 마수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정연 시민단체 활동을 늦게 하게 되었다 .별로 한 것이 없어 활동 소감을 쓰기조차 부끄럽지만, 6개월 동안 죽어라 투쟁한 애국의 흔적, 역사의 한 페이지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쓴다.

사전투표 사전선거하지 말라고 공정연, 시민연대가 지하철 탈 때마다. 거리거리에서 홍보하고 다녔건만, 민주당과 미통당의 전략적 계략에 사전투표 대거 실시-부정 선거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들은 2차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연세 많은 애국자(한때는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분들)들의 열성에 감동받았으며, 어느 조직이든 앞서서 수고해주시는 몇몇 때문에 그 조직이 지탱해 나가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그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불법시민감시단으로 새벽조로 활동한 것, 개표참관인으로 새벽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 것...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다 .

끝으로 공정연을 통하여 귀하신 몇 분을 알게 되었고 큰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입니다.

다. 최홍균 님 (서대문구)

자유본 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1. 자유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2. 선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3. 공직선거법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4. 일인시위와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5. 개표참관인으로 밤샘하였습니다.
6.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7. 자유는 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강소향 님 (종로구)

투표참관인을 마치고

선거가 끝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난 5월 6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장·종교·언론의 패권교체”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면 이인영의 말은 위의 세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대여당을 이용, 개헌을 하고, 총성 없는 혁명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부인,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무한질주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촛불광장에서 민심으로 혁명을 이루었다는 자화자찬의 독재정권이 광화문광장의 ‘조국구속집회’와 ‘전광훈목사의 집회’를 ‘극우화된 기독교집회’로 규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사대, 굴종외교도 모자라 온갖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에 절망을 넘어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 탈원전, 소득주도경제 등의 정책들을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빈국으로 가는 반시장 정책들을 쏟아내고도 반성이 없습니다.

저는 3기신도시로 토지가 편입된 하남교산지구의 고향지키기대책위원회 사무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의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지금도 국토부와 많은 협상의 자리에 들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온갖 설움만 받다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농민과 지주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는 1인 시위를 하남시에서 함과 동시에 하남시 위원들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의 역할을 설명하고, 선관위 계장의 발언을 녹음하는 한편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라는 취지로 선거관리원의 사전투표함 감시조 활동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사전선거는 부당하며 우리는 자유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선거감시 활동을 함을 알리고, 감시조를 가동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4.15 당일에 투표하자.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밉다고 투표 안하면 국민주권 포기. 당일투표 하세요》등의 스티커를 버스정류장마다 선거 전전일인 4월 13일 부착했습니다. 미리 붙이면 누군가 떼어버릴까 봐 가장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부착하고, 1인 시위도 중요 지역에서 이어갔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은 사실 패스트트랙의 부당성을 국회의원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지원단의 1인 시위를 하면서 종로 지역구에서 본격적으로 지역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부착해야 하는 공명선거지원단 특성상 이름표를 배달하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 모임과 한 달에 두 번 있는 지역모임도 시간 되는대로 참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폐렴으로 인해 광화문집회가 무산되면서 우리들의 광화문 모임도 소규모로 이어지고, 야당의 공천 파동으로 종로구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미래통합당의 선전을 기대하며 황교안대표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기도모임이면 기도모임, 야회집회면 야외집회 참여로 선거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으로 당원이 되어서 사전선거 참관인으로의 참여는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공정연이라는 단체와 연대하면서 기독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입당해서 참관인으로 사전선거일 2일, 선거당일 참관인 모두 3일간 일하면서 4.15 총선을 모두 참관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전선거 이틀 동안 중복투표가 불가하다는 관내, 관외투표는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지문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진행되기도 하고, 전자펜으로 서명하는 등 형식적인 본인 확인의 어불성설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관외투표 봉투들은 바구니에 실려 단 한 명의 참관인도 없이 우체국으로 실려가서 4박5일만에 개표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감시가 모두 헛것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까지 만들어놓고도 사전선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사전선거의 허술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이용해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파기되고, 해킹의 위협에도 아무런 감시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관외선거함의 이동경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선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2의 14승 정도의 정확도를 믿고 유전자검사를 인정하는 법제도하에서 2의 수천배승의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4.15 선거의 확률분포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총선 이후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막아낼 수 있느냐 입니다.

사실 하남 땅은 농부이신 아버님이 남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땅인데 이제는 한 평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당한 그동안의 서러움과 차별 정책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많은 양도세까지 내며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인영 대표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 일에만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전 국민이 토지공개념의 희생자가 되어서 임대주택 신세로 전락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국가가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잣대를 휘두르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도 모두 국유화되고, 외국기업들은 모두 떠나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화는 무한질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고 지역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움직임에 다시 합류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헌을 저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장난이냐”, “헌법납치 음모 결사반대” 등 사안별로 정부의 일사불란한 사회주의 음모를 막는 일에 앞장서 1인 시위 등 자유시민들이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시장경제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 언론, 검찰을 재편하고도 모자라 종교까지 정치적으로 재편한다는 이인영의 패권재편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수많은 완악한 인물들의 정치적 말로를 보며 반드시 실패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망발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마. 이형복 님 (종로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부정투표 선거에 대하여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서경석 목사가 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무효에 관한 집회가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국회의 망나니 같은 놈들에 의해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등 60여 명의 자유한국당 국개의원들의 동참으로 탄핵안이 통과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은 아스팔트 집회 참석이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이 각 군별로 구국동지회를 결성하였다. 국군 장교 종류가 11개나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공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때 나의 동기생 3명이 의기투합하여 구국동지회를 결성했다.

그 후 매주 토요일이면 시청광장에서 공군 깃발을 휘날리며 광화문 거리를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었는데,,, 5년 차를 맞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건만... 더욱 나빠진 대한민국에 한숨만 나온다. 내 생각으로는... 나이 드신 사망자 중에 집회 행사에 참여하다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로부터 햇수로 5년이 흐른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인 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왔고 내 나름대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 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에는 할 말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고, 나라 부채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취업문제는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판단 실수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젊었을 때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애들 교육문제에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으리라고만 생각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세대의 커다란 실수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아이들이 좌경화 의식을 배우고 또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우리는 왜 이리도 큰 사실을 간과했다는 말인가! 일부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우리는 어찌 이렇게 환호하는 것일까.

지난 대통령 선거 5.10선거 때 일이다. 개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개표율 10%정도 되었을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광화문 대로에서, 문재인이가 경찰 사이드카의 경호를 받으면서 행진을 하는 장면이 탤레비젼에서 나오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개표가 10%밖에 안 되었는데 당선 퍼레이드라니!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다. 여론조사 출구조사에서 41.6%라고 했는데 뒤에 당선득표율 또한 41.6%였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왜 이리도 침묵을 지키는 것일까.

그 당시 수많은 시민 단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신청했었다. 기억으로 재판 신청하는데 약 20억 원이 든다고 성금 후원을 받고 그랬었다. 대법원에서 거의 3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판결을 안 내리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당시 전군 구국동지회에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나를 포함한 전군대표 몇 명이 국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주영을 만났었다. 국개의원 나리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정작 개 같은 놈을 만나서 설명을 하니까... 그놈 표정이 귀찮으니까 빨리 하고 가시오. 하는 표정이었다. 아이쿠! 이런 놈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개의원이라니! 하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방지 및 사전선거 안하기 운동을 여러 시민 단체에서 했었다. 특히 사전선거는 부정투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나이 먹은 우리네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한겨울 그 추운 날씨에 늙은 사람들이 휘장들을 두르고 다녔다. 절대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실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 20대 총선이 약 7%인데 이번 총선은 약 26%라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약 4배인 수치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종로구 평창동이다. 미통당 후보가 황교안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종로구 시민선거지원단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사전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헛지랄을 했단 말인가 하는 자괴심이 든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당대표이고 대통령 후보란 말인가.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 난세 속에 영웅이 나온다 했는데 꿈이 이루어질지 기대해 본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이 다가왔다. 내가 같이하고 있던 공정연에 미통당 참관인 신청관계를 알아보니 이미 미통당 참관인 배정은 끝났다고 한다. 아니 우리한테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가하고 물었더니 이미 끝나서 방법이 없단다. 헛웃음밖에는.

그래서 물어 물어서 기독자유통일당과 합의를 모았다. 참관인 신청을 하려면 자유통일당 당원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당원에 가입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관인 신청을 하고 투표 참관인을 했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은 안 되었다. 왜 안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개표참관을 해야, 내가 봉인 및 사인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어제 이봉규tv에 이애란 박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1월에 중국동포와 문자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160석을 세팅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니 중국 동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할 수가 있을까? 총선 직전에 유시민이가 하는 말이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해보면 이미 프로그램 상으로 다 세팅 완료했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대선이나 이번 총선이나 똑같이 조작으로 치러진 부정투표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나서 부정투표 처리 하자고 하는데, 미통당 국개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꼭 닫고 있다. 이것을 나는 알고 싶다. 왜 그러는지, 무슨 고리에 갇혀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왜 그러는지.

오늘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과 대검에 부정투표 고발장을 냈다고 한다. 미통당에서 첫 번째 한 것이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전국 규모의, 36개소에서의 고발인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다.

아무튼 전 국민이 분노해야 하는데 어찌 이리도 조용할까!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니 이미 끝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이봉규tv에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신문전면 광고를 내고 집단으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3.15부정선거후 -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 한 달 만에 4.19 의거에 의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그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2020 4월에, 이형복 드림.

바. 장일식 님 (종로구)

부정선거가 아니고 우파가 이겼다면 고생한 보람도 있고 마음도 홀가분 할텐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날은 아니었지만 사전투표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며 다녔던 일들을 새삼 생각하면서,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패배한 지금으로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고발로 모두 이겨서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고 하루속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지원단에서 잠시나마 활동했던 인연 감사합니다. ^^

사전투표 참관기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종로구 북촌로 35) 지하1층 대강당 사전투표소에서 4월10일 오전, 4월 11일 오전, 이틀 동안 참관인 했습니다.

▪ 4월 10일 (첫째 날)

저는 참관인 신청을 "미래통합당" 당원이므로 일찌감치 참관인 신청을 했는데 미통당측에서 이미 모두 마감이 되었다고 하여 급히 서둘러 우여곡절 끝에 기독자유당으로 참관인 신청을 마침.

4월 10일 오전 일찍 서둘러 준비하고 가려는데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독자유당 후보자가 하루 전 사퇴하는 바람에 확실한 연락이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 하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1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기독자유당 후보는 사퇴해도 비례대표당이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하여 투표시간보다 뒤늦게 도착 하였는데, 민주당, 미통당 참관인이 있어 4월 10일 첫날 투표 전 봉인지에 사인은 못하고 사전 투표 다음날 4월11일은 오전에 일찍 와서 개표 전 봉인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 참관인은 이상하게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이 없이 주민센터에서 갑자기 전화해서 왔다고 하며 미통당 참관인은 민주당 쪽 사람들처럼 보여졌어요.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개표할 때 힘들다며 개표직원을 생각할 뿐더러 우파인 미통당이 제가 봉인지에 사진을 찍으니 그건 왜 찍냐고 오히려 반문하는데? 그냥 6시간 때우는 식으로 일관함. 미통당 쪽에서 참관인을 주민센터에다 의뢰한 것 같았고 너무 무책임하고 관리가 허술함을 느꼈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떤 젊은 아가씨가 투표책임자한테 투표확인증을 받아가는데 사전투표라 직장인이면 가까운데서 왔겠고, 점심시간이면 얼마든지 투표하러 가는 것 인정해 줄 텐데, 굳이 확인증을 받아 가는 것을 보고 혹 민주당을 찍으면 무슨 혜택을 주는지? 확인서 종이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 4월 11일 (둘째 날)

4월11일 저는 오전 참관인을 끝내고 오후에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종로 선관위 사무실을 갔었는데 CCTV 설치 재확인 후 각 지역에서 온 투표함을 선관위 창고에 보관한 후 창고문에 봉인지 인증샷 마무리함.

관외봉투 투표함은 종로 각 지역에서 온 봉투 개수를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우체국 차에 싣고 가려는데 경찰도 없이 운전기사와 여직원만 탔길래, 같이 동승해서 우체국까지 가려 했으나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 완강하게 거절당해서 동승 못하고 다른 참관인이 순간포착 사진 남겨둠.

처음 사전투표 활동 할 때부터 미리 종로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전투표 전날 트럭들이 분주히 드나드는데 트럭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문구가 완전 주사파 민노총들의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아연실색!! 인증샷! 사진 찍어둠.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다니며 고생한 보람도 없이 종로구 황교안 대표는 사전투표 하라고 역으로 엇박자를 놓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사. 황영근 님 (종로구)

투개표현장의 속살을 잠시나마 지켜보며 시민으로 투표만 하던 입장에서, 짧았지만 감시하는 입장으로 투개표현장을 바라보니 소월의 시가 생각나더군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전혀 몰랐고

선거라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대로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쳐 몰랐네요.

또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국민의 권리찾기가
설움이 될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지요.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최근 우한폐렴을 통해 느끼고 있고 이번 선거와 투개표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김영수 님 (용산구)

市民 監視團 體驗.

꽃이 꽃답지 못할 때 우리는 꽃이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하물며 한 송이 남은 꽃마저 微物에 의해 짓밟히고 蹂躪되어 胡蝶이 犯接할 餘力마저 喪失케 한다면 미래는 至難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누군가에 의해 意圖했던 대로 흘러갈 물이라면 차라리 그곳에 몸을 씻지 말았어야 했다고 본다.

내 안의 선거를 백악관 청원사이트까지 眞實을 糾明해 달라고 要求하고 있는 瑤池鏡은 放置인지 造作의 疑惑이 殘酷했단 말인가? 아니면 膾炙하는 陰謀論이 拙劣했단 말인지 모르나 참으로 恨스러운 일이 부단히 展開되고 있는 것 같다. 事前投票 現場에는 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다. 단지 豫想보다 投票率이 높다하여 豫後가 難産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市民監視團의 한사람으로 나선다는 것에 조금은 愼重한 마음으로 정해진 장소에 섰다. 헌데 監視團의 監視는 허울 좋은 監視일 뿐 너무도 無氣力한 監視였고 無對應으로 차갑게 밀려오는 추위를 이기려 동동걸음으로 建物 外郭 一部分만을 오가며 밤하늘의 별 중에 내 별을 찾아 나서야 했다. 찾지 못햇다. 내부에 사람은 있건만 투표함 集計所라는 곳은 森嚴함도 쏟아지는 눈총도 選擧 雰圍氣도 없고 누군가 일부러 흩으러 뜨리려는지 失望感을 넉넉히 받아야 했다. 選擧函 集合所가 이리도 궁벽진 곳과 시설에 24시간 人的 監視도 되지 않는 여길 내가 무얼 監視하러 왔는지를 모르게 했다. 이것이 選官委가 하는 일이고 정부가 치르고 있는 선거로 여야가 이리도 無關心하고 太平했했단 말인가? 특히 야당은 쥐약 먹고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주울 생각이었나 보더라. 선관위도 정부도 경찰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특히 야당은 100% 책임을 져야 하고 歸責 事由를 見責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膾炙하는 말들이 街談巷說인지는 모르나 否定의 痕迹은 너무도 많은데 멍청하고 無能할 정도로 鬪爭力을 喪失하고 있는 野堂은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愚昧한 黨이 되고 있음이 기찰 노릇이다. 어느 地域區 하나가 속았다면 정말 좋겠다. 국민 모두가 감쪽같이 우롱당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露呈되는 이야기들에 얽혀 자꾸만 掩襲해오는 내 情神狀態를 疑心해야겠다. 野黨은 속곳 벗고 은가락지만 끼지 말 것이며 바보는 藥으로 못 고친다는 걸 銘心하고 選官委는 속곳 열둘을 입어도 밑구멍은 밑구멍대로 다 나온다 했음을 알라.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고만 믿으려는 野黨으론 안 된다.

與黨이든 野黨든 悠久하고 壯大한 民族의 歷史를 一葉障目하지 말고 不欺暗室하지 말기를 所望한다.

사전선거함 용산지구 감시단 한 사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머문 자리에는 추억이 남는다.

자. 김창조 님 (용산구)

용산 선관위 감시조 보고합니다.

선관위가 입점한 코레일유통 건물에 도착 후 건물내부에 진입해서 투표함 보관장소인 선관위 회의실 위치를 승강기기준점에서 각도와 거리를 어림하고 건물 밖에 나와서 어림 산정한 보관장소 창문을 확인해두었습니다.

18시 반부터 투표함 이송차와 경찰 에스코트 차량이 차례로 건물현관에 도착했고 차량에는 동승한 경찰관 2명 선관위직원과 감시단원 2명 투표함 짐꾼 등이 투표함과 서류박스를 하차하여 건물 2층 선관위 회의실로 옮기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때 차량내부에서 어떤 표 조작질도 불가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0시가 넘자 현관셔터는 닫혀지고 후문은 시건이 된 상태로 건물 관계자는 출입을 하면서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을 하고 투표함 보관실 창문은 21시가 넘어서 소등되었습니다. 셔터가 닫혀진 현관에 우리 감시조 2인이 낚시의자에 앉아서 대화중에 건물 당직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나와서 우리 동태를 살피는 눈치를 채고 정면돌파했습니다. 즉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투표함 감시중이다'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더니 그러냐고 응수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CCTV로 감시하다가 확인하러 나온 걸로 보입니다.

23시 반인 현재 전 건물 창이 소등되어있고 4층 창문 2개소만 전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비상등일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 현재 바람이 살랑거리는데 한기가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 낚시의자를 준비하고 영하20도에 필수인 오리털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통해서 발가락이 조금 시리다고 느낍니다.

차. 김호표 님 (용산구)

21대 총선 투개표 참관 소감: 사전투표·개표 부정 방지 측면

1. 사전투표 자격, 즉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아닌, 인식기가 인지 못하는 구청장, 동장이 발행하는 노인복지카드로 사전투표시행 ⇨ 인식기가 인식하지 못하자 투표소의 최상위 선관위 직원의 판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투표를 허용. 현행 제도에서 허용하나 재검토 요함.

2.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전제로,

2-1 사전투표함의 투명성 확보

- 사전투표 보관소의 CCTV의 사각지대 없도록 확인 배치, CCTV의 감시를 일반인에게 허용
- 투표함의 투표소 보관시작부터 개표장으로 이송 시까지 주야 24시간 보관소 바로 앞에서 감시단의 감시 허용.

2-2 투표 종료 시, 투표함 봉인과 함별 봉인지(3장)의 사진촬영, 이 사진의 공증, 개표장에서 개함 직전 봉인지의 촬영한 사진과의 대조로 봉인지의 이상유무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

3. 개표소 참관 철저

3-1 개함 전 봉인지 확인

- 투표소 마감직전 봉인지 사진촬영 확보(전 투표함 사진, 한 함당 3장)
- 봉인지 훼손여부 확인 능력 확보
- 봉인지 훼손의 발견시 행동요령 숙지

3-2 개표분리기 심사계수기의 조작 감시

- 오분류 감시(남의 표 도둑)
- 수치조작 감시(나의 표는 -, 상대 표는 + 되는지)

3-3 개표상황표 확인과 함별 개표상황표 확보 내지 촬영

- 개표분리기와 심사계수기만 철저히 정확도를 유지하면 여타의 의문 즉 QR코드 문제,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문제가 해소되며, 개표상황표의 작성의 신뢰와 이의 확보만 이루어지면 입력보고자의 조작에 대한 의문도 해소된다.
- 상기 절차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담당자에게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 장소의 개표관리 위원회에 알리고 처분을 요구하고 사진,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다.
- 무엇보다 이러한 절차와 요령 등 미리 참관인에게 참관교육이 필요하다.

카. 이진욱 님 (용산구)

이번 총선은 제가 좌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파가 된 후 처음 치룬 선거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촛불집회를 나가서 민주화 투사라도 된 마냥 뿌듯해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걸 알고 처음 나간 나라사랑 태극기집회는 저에게 문화충격이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이 달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군복을 입으신 모습이나 쎈 모습들이 엄청 강하게 다가오고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됐지만, 멋진 한강의 기적을 힘들게 이뤄내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애국심으로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집회에 참석한 후 집에 가던 도중 집회에 나온 다른 청년들과 만남을 갖고 단톡방을 만들고 조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돕게 되었고, 저 또한 각 애국단체에 들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박동숙 간사님을 뵙고 공명선거지원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명선거지원단에 대한 홍보도 하여 몇몇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공명선거지원단 활동도 병행했으며, 좌파 쪽 사람들과 정치에 관심 없는 젊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뉴스 및 동영상자료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거기간이 되어 지역구에서는 차명진 캠프에 들어가 후보를 도왔습니다. 상대 진영의 김상희 의원이 군 동성애 지지자라는 걸 알고 반동성애 운동을 하자고 제의하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사, 1인 시위, 전단지 돌리기 등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일들로 마지막까지 선거를 치르느냐 못 치느냐의 기로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선거비를 보전하고 후원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우리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세련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도 좌파 쪽에서 잘하는 점은 배우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면서 문화, 경제, 사회면에서 여러 가지 건전한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한마음 한뜻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대패 후 마음이 힘들었고 당분간 유튜브도 안 봤지만, 지금은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함께 활동했던 자유보수 우파청년들과 이승만대통령의 정신을 이

어받는 새로운 청년조직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파에 많은 인재들을 데려오고 자유보수우파 단체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늘고 바른 교육과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우파가 단결하여 다음 선거는 꼭 승리하여 대한민국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타. 김근수 님 (마포구)

권리를 위한 자유시민으로서의 투쟁...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사기탄핵을 거치며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도 거짓선동과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면 무참히 짓밟히고, 오히려 그 당연한 권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진실, 자유, 민주주의...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움직였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대한문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이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후 점점 그런 생각들은 없어지고, 왜 더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었다.

가까이 다가온 선거를 대비해서 지역별 활동가를 발굴하고 조직을 만들기로 방향이 정해지고, 매주 시청~광화문 일대에서 활동을 벌이다 2월 말에는 우한폐렴바이러스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눈, 비, 바람 등 기상 뿐만이 아니라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적대적인 공권력,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이면서 대응책도 늘었다.

결과적으로는 미완의 전투였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한폐렴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광화문에서 시청광장에 이르는 아스팔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한층 더 강화된 전투력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파. 윤도원 님 (마포구)

※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께 드린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상암동 거주 윤도원입니다^^ 전에 몇 번 지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마포구 '개표참관인'(기독자유통일당)으로 참여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독자유통일당'의 득표율이 전의 2.7%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고 '검표의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의 답장입니다. ^^

기독자유통일당(고영일 대표)에서 어제까지 서울행정법원, 대전, 광주, 인천, 부천지방법원에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4월15일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속에서는 선거부정 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 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금품살포행위, 공직선거 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행위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 돌봄 활성화쿠폰을 발행하였으며, 무려 9,212억 원(대상 어린이 230만 명, 보호자기준 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돌봄쿠폰 발급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선거관리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 되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를 근거로 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함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 에서 선거결과는 이 사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의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컴퓨터와 관련한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의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선거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 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가 실행하며, 선거 결과 또한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의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반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임차기간과 CCTV 영상의 기록이 금년 5월1일 경에는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법부를 통하여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2020.04.29
기독자유통일당

〈〈투표함 등 보전신청〉〉

신청인 :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변호사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박성제, 이순호, 정회석
전화 02-553-3040

피신청인 : 서울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함석천
02-742-1390

신청인은 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보관하는 [별지]목록기재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표함 등 보전을 신청합니다.

다음

Ⅰ. 증명할 사실

2020. 4. 15.자 서울 종로구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인 사실

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대상

1) 청구원인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금품살포행위,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행위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의 근거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돌봄쿠폰을 발행을 하였으며, 무려 9,212억원(대상 어린이 230만 명, 보호자 기준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돌봄쿠폰발급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선거관리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를 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음을 근거로 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함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 4. 15.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선거결과는 이 사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의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전의 대상은 [별지]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2020. 4.15.자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구 투표지(잔여투표지 포함)·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투표지 상자·선거인명부·부재자 신고인 명부·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지 회송용 봉투·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QR 코드 발생 프로그램·투표함 열쇠·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CCTV 녹화영상·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CCTV 로그기록·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자료·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발급 및 확인자료 등에 관한 서류·개표시에 사용된 개표기 개봉 열쇠(또는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개표기 운영과 관련된 제어용 컴퓨터(및 그 하드디스크 일체)·해당 선거결과 데이터를 저장한 외부(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서버·서울 종로구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개표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서울 종로구 개표기와 개표소의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및 로그기록·서울 종로구 전산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및 투표함 일체.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QR 코드를 이용한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또는 관외사전선거 투표지를 과거와는 달리 우체국 택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컴퓨터와 1:1로 연결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개표하였으므로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적 조작이 개표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총선의 무효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단순히 투표지만 보전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운영, 본인확인기 등에 관련한 외부 발주를 하였고, 발주 내역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다면 당연히 CCTV에 접속한 아이피와 접속 시간대를 알 수 있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분류기와 컴퓨터는 1:1로 연결하여 개표에 활용하였으며, 위 제어용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위 컴퓨터에 대한 서울종로구 전산시스템 내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0. 1. 30.에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에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SAN 스토리지 등을 추가 도입하는 등으로 관련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여 온 바, 과거에 투표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세고, 이를 분류하여 수기로 결과를 기록하고 전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하던 때로부터 지금은 시대 모습이 아득히 변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컴퓨터와 관련한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 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의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선거 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가 실행하며, 선거 결과 또한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의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Ⅲ. 증거보전의 사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2020. 4. 15.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입니다. 피신청인은 서울 종로구 선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2)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소송에 대한 피고적격이 있는 자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외부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바, 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은 상식 밖의 결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인 사전선거 투표가 본투표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2016. 4. 13.경 있었던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중 아래에 기재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는 평균 2.8%에 불과하며, 유력후보들 사이에 5.6%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정도여서 오차범위 내이고, 무엇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는 0%에서 7%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20대 국회의원 선거자료를 발췌하여 만든 표입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중 아래 표에 기재한 지역에서 사전투표결과와 당일투표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숫자가 고르기는커녕 10%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곳은 오직 한 군데이고, 평균 차이가 11.7%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명백히 오차 범위 밖이고, 유력 후보들의 사전투표 표차를 23.4% 벌릴 수 있으므로 선거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자료를 발췌하여 만든 표입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믿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1) 사전투표 제외한 당일 투표만의 결과로만 의석을 배분한 경우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무소속	5석
정의당	1석

2) 관외, 관내 사전투표만의 결과로만 의석을 배분한 경우

미래통합당	44석
더불어민주당	204석
무소속	3석
정의당	1석
민중당	1석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50,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위 연령대는 미래통합당을 가장 지지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쏠리는 경험칙에 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0, 40대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이고, 50, 60대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대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제21대 국회의

원 선거 사전투표는 50대가 사전투표자 중 21.9%를 차지하고, 60대 이상이 30.7%를 차지할 정도로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계층이 가장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30, 40대는 각기 17.67%, 12.72%로, 두 세대를 합쳐도 30.39%밖에 되지 않아 60대 이상의 참여 비중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또한, 본투표에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제외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층인 50,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본투표 결과가 미래통합당에 불리하게 될 것임을 예견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투표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가져올 정당이 되었을 것이라는 통계를 해석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망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뒤에서도 밝히듯이 사전투표일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국회의원 후보의 제명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어 본투표가 당연히 사전투표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는 몰표 특성이 강한 특정 지역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전 등지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유력 후보에 비해 10% 이상의 득표를 하다가 본투표에서는 정작 저조한 득표를 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타 정당 소속 또는 과거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후보보다 득표를 많이 한 지역구가 124석이나 된다는 점 또한 실제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 힘을 더 실어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전국적으로 관외선거와 관내선거의 비율이 같은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지역, 소위 접전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득표율의 정당별 비율이 63:36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에서 보듯이 총 사전투표수 대비 해당 후보의 관외득표율과 관내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역구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고,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컴퓨터로 인한 처리가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종로 선거구 관외사전투표수

미래통합당 황교안	3,16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6,472

또한 관외사전투표수를 관내사전투표수로 나눈 값이 상당히 일치하는 지역구가 속출하고 있는데, 일부만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외/관내 사전투표수: 11,777 / 24,093
- 관외/관내투표 비율: 0.269083 : 0.268625

서울 송파병 선거구

	관외사전투표수	관내사전투표수
미래통합당 김근식	4,992	15,68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8,377	26,646

- 관외/관내투표 비율: 0.318286 : 0.314381

성남 분당을 선거구

	관외사전투표수	관내사전투표수
미래통합당 김민수	4,488	15,20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7,008	23,826

- 관외/관내투표 비율: 0.295107 : 0.294132

한 개의 지역구에서 1번도 나오기 힘든 결과가 여러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외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투표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소결

위에서 보듯이 이번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는 자체 선거 결과로도,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같이 다른 시기의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와 비교해도 경험칙에 반해 외부의 개입의 존재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3.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강행규정으로서 투표 및 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의 발급과 인쇄의 방식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선거관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사전투표지에는 막대형 기호가 표시된 바 코드 형태로 표시하지 않았고 QR코드(막대형 기호가 아닌 문양을 표시한 전자정보인식 방식)를 인쇄하여 전자개표기로 개표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 점은 명백히 위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개표조작이 의심이 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하게 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조직에 대한 이 사건 보전신청은 선거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전국적으로 소위 격전지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고, 이는 서울 종로구 또한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본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위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낙선한 경우까지 발생하였지만 낙선한 후보자들이 정치적 현실적 압박감으로 선거무효소송및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전국적으로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전국적 투표율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한 정당으로, 그 위법을 확인하고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고, 위 본안 소송에서는 모든 투표지의 재검표 및 CCTV 영상 내용의 확인, 투표 결과를 저장한 서버의 기록 등 별지에 기재한 대상이 그 입증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투표지와 CCTV 영상, 투표 결과를 저장한 서버의 기록 등 별지에 기재한 대상이 훼손이 되거나 파쇄가 되면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투표함 등의 보전 처분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Ⅳ.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2020. 4. 15.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는 외부의 개입이 존재하였음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선거의 4대 원칙 중 직접선거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4조3)에 따라서도 선거의 무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 서류들과 전산정보를 증거보존하지 아니한다면, 위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별지에 기재한 대상을 법원의 관리 하에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인을 비롯한 서울. 경기. 대전.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조작이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컴퓨터의 프로그램 조작 등 선거무효 사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임차기간과 CCTV 영상의 기록이 금년 5월1일경에는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결정이 그 이전에 집행되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소갑 제1호증 선관위 발주내역
2. 소갑 제2호증 20대 총선 분석자료
3. 소갑 제3호증 21대 총선 분석자료
4. 소갑 제4호증의 1 21대 총선 관내투표 관외투표 비율
5. 소갑 제4호증의 2 21대 총선 관내투표 관외투표 비율분석
6. 소갑 제4호증의 3 21대 총선 관내투표 관외투표 분석자료

2020. 4. 28.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이순호
변호사 정회석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목록] 보전대상 증거목록

1.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전산자료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함의 증명인이 있는 복사본)
2.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무효투표지 포함)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
3.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봉한 투표함(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위한 우편투표함 등을 포함) 일체와 봉인지
4.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거소투표 자 명단, 거소투표 등 발

송·접수록 또는 투표대장) 일체

5.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록·집계록(또는 개표대장) 일체
6.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선거록(또는 선거대장) 일체
7.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8.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부재자 신고인 명부 일체
9.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일체
10.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11. 서울종로구 선거구에 관하여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12.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 저장디스켓과 봉쇄와 봉인 일체
13.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영상
14.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등
15.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위 11, 12에 관한 각 CCTV 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CCTV 로그기록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프로그램 일체,
16.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자료 일체
17.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등 일체
18.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시에 사용된 개표기 일체
19.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시에 사용된 개표기 개봉 열쇠 및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가 있다면 해당 자료 일체
20.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당시 개표기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된 제어용컴퓨터(및 하드디스크) 일체
21. 해당 선거결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외부위탁) 보관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 선거관리통합서버 · 스토리지 · SAN스위치 · 스위치 · 백업시스템 등 자료 일체
22.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일체
23.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개표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24.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
25.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전자투표기, 개표기와 개표소의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및 로그기록
26. 서울종로구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 현황

시국 관련 활동내역과 '공명선거선거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1. 공수처법 반대,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방문 항의
2. 『핵다이제스트』 및 공명선거 전단지 배포 활동: 공명선거지원단 회원
3. 1인 시위《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선거 NO,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한다》
4.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규칙(사전선거조항 입법미비): 대국민 계몽활동이 요구되며, 미비한 공직선거법 법령의 보완이 시급해 보임.
5. 서북권역 선거관리위원회(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방문.
6. 사전선거 투표함 이송차량(70호2422) 추적: 비정상적 이동경로에 대한 '해명요청서' 제출.
7.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및 주간 보안 감시.
8. 사전선거투표함(관내) 보관소 열람과 봉쇄·봉인지 확인, 관외(우편)투표함의 보관과 보안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면적인 조치가 요구됨. (우체국택배의 신뢰 문제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음.)
9. 개표참관인활동(2020.04.15.18시:00~2020.04.16.07:03): 관외 우편우표(이송봉투) 개함 및 투표지 적출작업은 봉투의 양면테이프 봉인부분을 열지 않고 기계로 봉투의 세로방향을 미세하게 커팅한 후 투표지를 꺼냄. 따라서 봉인부분 개폐 여부는 체크하지 않아 보안의 허실을 알 수 없었음.
10.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 기표를 인식하여 분류하는데 속도가 고속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이 각 후보자간의 득표를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파트인 '심사계수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 담보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이 분류기의 검정 및 성능, 그리고 사전조작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기계의 성능에 대한 공개검정 및 조작가능성 테스트 등).
11. 심사계수기 운용자의 성실과 후보자 기표란의 정확한 구별이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마지막 관문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문. (사람인지라 실수의 가능성이 엿보임. 계수기 속도를 빠르게 하면 구별이 불가능함.)
12. 공직선거법령 '사전선거투표용지' 문제점: 투표용지의 바코드(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하지 않은 것 등, 대법원2017수122 (2019.9.26) 판결로 다 면죄부를 받았음.

하. 박근희 님 (마포구)

2020. 4.15 총선. 공명선거지원단의 활동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2-3년 전만 해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인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면서도 언론에서 그려내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악의적인 내용들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 하는 정도의 의구심을 품었을 뿐 그다지 큰 문제의식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일과 개인적인 가치 추구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나 비상식적인 외교관계 등 이해되지 않는 정책들과 현실적인 경제침체를 직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태롭고 화나는 마음에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방송들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뱅모 박성현님의 '세뇌탈출'을 접하게 되면서 정치 문외한인 저로서는 그나마 좀 더 깊이 있고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탁월한 식견과 아낌없는 지식공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작게나마 후원을 해야겠다 싶어 '이선본'에 회원으로 가입했었고, 그 인연으로 자동적으로 공명선거지원단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상황상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감시 등에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명선거지원단의 여러 회원분들께서 카톡을 통해 올려주시는 활동 내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사전투표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나 사전투표함의 부적절한 보관방법, 지역별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부재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은 직접 감시하고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더 잘 언급해주리라 믿으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지원단의 감시 과정을 바라보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유시민들의 애국심과 열정에 가슴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허술한 관리제도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서 추위에 떨며 투표함을 감시하게 만드는 현 정치권의 비겁함과 부도덕함에 분노가 치미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와 6. 25 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너무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혜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로 한 이 땅의 수많은 이름 모를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분투와 위업에 감사와 경의를 담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혜택 속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와 정치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했고, 많은 기득권들은 권력쟁취와 자리보존에만 혈안이 되어 부정부패를 일삼고 비겁함과 타협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독하지만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와 같은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개인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누려온 자유 대한민국의 혜택을 대물림 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표함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신 공명선거지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활동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에서 연대와 활동을 통해 자유시민의 정치문화적 소양이 확대되고 나아가 이러한 조직과 연대가 사회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공명선거지원단 서북연대 구성원들로 활동하셨던 여러분들의 학식과 열정을 보며, 이러한 지역조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발된다면 선배세대와 후배세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아직 정치현실에 관심 없거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통한 올바른 소양과 역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화나 음악, 그림이나 소설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자발적 시민운동을 이끌어주신 뱅모님 이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거. 정유순 님 (은평구)

박근혜 탄핵 당시까지도 정치에 무관심해서 문재인을 찍었다 .

1년 전쯤 이정권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됐고 우파 유투브를 통하여 나라가 심각하게 흘러가는걸 알게 됐다.

부정부패에 속이 끌었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며 이 지경이 된 것이 내 죄처럼 느껴져 안절부절 못하다가 세뇌탈출을 통하여 공명선거지원단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나마 무관심의 죄를 씻어볼까 마음을 쓸어 내렸다.

우리 아이들은 중국바이러스와 더불어 엄마의 애탐을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다. 피켓을 매고 처음 나갈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됐으나 곧 적응이 됐고 무관심한 사람들과 냉소적인 반응에도 담담할 수 있었음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고 위기의 나라를 위한 나의 행동의 자부심이 있었다.

한 달 여를 사전투표는 표 조작이라고 지하철로 거리로 다녔는데 사전투표가 27%나 되는 데는 적잖이 실망스럽고 힘이 빠졌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임무가 있기에 다시 맘을 다잡고 선관위 지킴이 당번을 서게 되었다.

둘째 날 맡은 시간에 가서 지난밤에 선관위직원이 KT직원이라 하며 불룩한 가방을 들고 앞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서 경찰을 불렀고, 나올 때는 가방이 날씬해졌더라는 소식을 접하니 기도 막히고 두려움도 있었다. 앞으로 내 임무를 잘할 수 있을까?

오전 9~12시 까지 선관위에 올라가 관내투표함 시청 참관서류를 작성하고 문에 사인지를 촬영하고 안에 투표함을 촬영하고 관외투표 봉투를 분류하는 걸 (6~7명) 지켜서 보고 있는데 그들이 부담이 됐는지 앉아서 계시라고 의자를 갖다 주었다. 그러나 관외투표함은 사무장 방에 두는데 그곳은 들어올 수 없다하여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을 우리를 부담스러워 했고 나중엔 노골적으로 일에 방해가 된다고 표시를 하기도 했다. 그런 일을 5일 동안 하는데 4. 5일차는 사진촬영을 못하게 중앙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기만 하라고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런 훈련을 디테일하게 받은 게 아니어서 이견은 말도 못했다.

마지막 날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장으로 옮기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모두 동원하여 4사람이 1층과 선관위사무실을 나누어 카메라를 준비하고 형사 같은 마음과 눈을 뜨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익스프레스 차에 모두 옮기고 개표장으로 가는 차를 뒤에 곧바로 따라가는 상황은 마치 첩보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슴도 뛰고 그런 경험이었다.

명지전문대 개표장은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을 따라 가면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차가 서너 대 있었던 거 같고 어떤 차는 동사무소에 보관하다가 가져오는 차도 있었다고 동료분이 들었다고 한다. 선거지원단을 안했으면 영원히 몰랐을 여러 가지 헛점과 구멍숭숭을 보면서 앞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선거부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단정한다.

같이 맘 졸이며 눈치 보며 애쓰신 지원단 여러분과, 윤도원 선생님, 김효표 선생님, 정일용 선생님, 박동숙 선생님, 최홍준 선생님, 이혜숙 전도사님, 원선자 집사님 ,최종협 장로님, 박태수 선생님, .그리고 성함을 못 외우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편집회의, 2020. 4. 22.)

너. 조선구 님 (은평구)

은평구 구산동 조선구의 하루

3월 21일 토요일

오늘 처음으로 패널을 메고, 유경호 선생님과 함께 대한문 국본 기자회견장까지 가는 길에서도 곳곳에서 만나는 동지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고, 전철2호선을 타고 시청역~합정역 환승~구산역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보는 이마다 관심을 갖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산역에서 하차하여 몇 군데 가게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는 동안에는 쇼핑 손님들의 관심을 피부로 느꼈고, 서오릉 고개 부근 아파트에 이르는 길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패널의 문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실감하고, 홍보 패널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일까지는 물론 불법개헌 저지투쟁을 위해서라도 열심이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박물관 앞에 모이신 회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3월 22일 일요일

조선구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투표 NO》 샌드위치 패널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장착하고 16:40~19:40 귀가 시까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우선 30분 거리 6호선 구산역에 도착하여, 1-2-3-4 출구와 출구 인접도로, 출구 인접 건널목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투표 NO》 홍보 시위, 전철을 타고 응암역으로 이동하여 1-2-3-4번 출구와 인접도로, 각 출구 인접 건널목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철편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여 연서시장 초입부터 끝까지, 1-2-3-4-5-6-7 출구와 출구 인접도로의 행인들과 각 출구 인접 건널목에 멈춰서서 오가는 통행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NO》 1인 시위를 한 다음 구산역을 거쳐 귀가할 때까지 총 3시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시위 도중 저와 같이 패널을 매고 시위를 하는 동지는 발견하지 못 했으니 공명선거 지원 1인 시위를 3시간 동안 펼친 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늘 공명선거 계도활동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공명선거 "샌드위치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4시경 집을 출발, 구산역 4번 출구 옆 두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NO" 1인 캠페인을 약 1시간정도 전개하다가, 응암역 4번 출구 앞 건널목으로 이동하여, 역시 《사전선거 NO》 1인 캠페인을 1시간 40분 정도 전

개하다가 저녁 7시가 지나서 자리를 떠나 구산역을 거쳐 귀가했습니다. 건널목을 지나는 행인들 중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파진영에서 사용할 선거 구호(예시)]

1. 정치는 엉망진창, 경제는 거덜내고, 또 찍어 달라고? 염치도 좋구나!
2. 외교는 개죽 쑤고, 국방은 무장해제, 이러고도 또 찍어달라고? 얼굴도 두껍구나!
3. 교육은 혁신학교, 어린 학생 좌편향 세뇌 일색, 이러고도 또 찍어 달라고? 양심은 어디 갔나?
4. 원전을 폐쇄시켜 국가동력 꺼놓고도, 공해투성이 태양광판에 탄산가스 미세먼지 발전이라니, 이러고도 또 찍어달라고? 아서라 말아라.
5.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시간 제한규정, 이러고도 또 찍어달라고?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냐?
6. 현금복지 늘리기로 근로의욕 죽여 놓고, 이러고도 또 찍으라고? 뻔뻔도 유분수지.
7. 공시지가 올려놓고 부동산세금 폭탄 안겨, 이러고도 또 찍으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8. 할 일 없는 공무원 수 폭발적으로 늘려놓고 빈둥빈둥 노는 꼴이 그렇게도 좋아 보여?

며칠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 더 다듬어 선거 운동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에~.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은 오후 4시 반에 집을 출발하여 구산역, 응암역을 거쳐 불광역 9번, 5번, 8번 출구 건널목에서 《사전투표 NO》 패널을 두르고 1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거의 모두 관심을 가지고 패널을 읽거나 문의를 하셨습니다. 5번 출구 건널목에서는 5·60대 아주머니 3분, 남자분 2분이 격려해 주시고, 8번 출구에서도 아주머니 한 분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5번 출구에서 어느 남자분은 "사전선거에는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5출구 건널목에서는 "공정선거팀"을 찾아가는 듯, 6번 출구로 오라고 해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가 지나서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면서 걷는 거리에서, 들르는 가게에서 공명선거 패널

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늘은 《사전투표 NO》 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3:23에 집을 나와 구산역으로 가는 길에 7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구산역에 도착하여 3, 4번 출구 부근 건널목을 걷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NO》 1인 캠페인을 오후5시까지 전개하다가 찬바람이 너무 춥고, 감기가 염려되어 중단하고, 귀가길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산역 4번 출구 건널목에서는 70대 아저씨가, "사전투표는 안 돼" 퉁명스럽게 한 마디를 하고 가셨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박동숙 간사님,《사전투표 NO》 패널 앞뒤에 덧붙일 비닐(종이)을 빨리 부탁합니다. 〈첫줄〉 4.15(적색) / 〈둘째줄〉 모두(검정색) 투표(적색) / 〈셋째줄〉 자유(적색) 대한민국(검정색). 앞뒤 같은 문구로 붙이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굵은 고딕체 글씨로, 종이나 비닐로. 지정 장소를 알려 주시면 찾아갈게요.

4월 3일 금요일

어제(4/2(목))는 강북삼성병원 정기진료 수진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4.3금)은 오후 2:30 패널을 두르고 집에서 나와 구산역 4번 출구의 두 건널목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오후 5:20까지 전개했습니다. 《사전투표 NO》 대신 《4.15 모두 투표. 자유 대한민국》 이라는 표어를 달력 뒷면에 빨강 검정색 연필로 써서, 패널에 빨래집개로 집어 붙여, 집에서부터 몸에 두르고 출발하여 귀가할 때까지 건널목 행인을 대상으로 1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구산역 건널목에서 어느 60대 남자가 지나다가 멈춰서서 "4.15투표를 하라구요? 저는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나쁜 짓만 하고 나라를 망치니 투표하고 싶지 않습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럴수록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잘 보고 뽑아야지요! 주권을 포기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은 써 붙인 표어를 한참 보더니, "사전투표는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늘 1시경 역사박물관앞 공명선거지원단 미팅에 참석해서 패널에 《4.15 당일투표하자》 표어를 덧붙인 다음 3호선을 타고 연신내역에 도착하여 연신내사거리에

서 건널목 통행인을 대상으로 《4.15 당일투표》 캠페인을 벌이다가, 마침 사거리에 세워놓은 2번 미통당 허용석 후보(은평을) 유세차량에서 로고쏭과 함께 "2번 허용석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방송이 계속되기에 차량에 다가가서 "허용석 후보"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견을 내세워 유세를 하라! 제가 당선되면 소득주도 성장을 철폐하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제1 야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구체성이 있는 정견으로 유세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에 내려가 환승·하차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당일투표" 캠페인을 전개하다가 너무 피곤하여 귀가했습니다.

4월 5일 일요일

오늘은《당일에 투표하자!》패널을 몸에 두르고 집을 출발하여, 신촌(기차)역 부근에 도착하여 볼일을 본 다음, 이대역까지 걸어가,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응암역에서 하차, 4번 출구 앞 건널목에서 오후 6:30까지 공명선거 1인 캠페인, 이후 전철을 타고 구산역에 도착하여 오후 7:10까지 《당일투표》 1인 캠페인, 오후 7:45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귀갓길에서도 1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오늘은《당일 투표》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3시 직전에 집을 나와서 구산역 4출구의 두 건널목과 구산역 개찰구를 오르내리면서 통행인을 대상으로《당일 투표》1인 캠페인을 전개하다가 오후 5:20경 귀갓길을 걸어 오후 5:53 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산역전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힘들어 자유혁명 목도리를 두르고, 방한복의 망토를 쓰고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어제(4.7.화)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캠페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4.15 당일투표》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2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까지 구산역 4번 출구의 좌우 건널목 통행인을 대상으로 "당일투표" 1인 캠페인을 실시한 다음, 응암역으로 이동하여 4번 출구 건널목에서 오후4시까지《4.15 당일투표》1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여 오후 5시까지 연신내사거리 건널목에서 1인 캠페인, 다시 구산역으로 이동하여 오후 5시 25분까지 4번 출구에서 캠페인, 귀갓길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오후 5:54에 귀가 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늘은 집에서 《4.15 당일투표》 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3:20집을 나와 구산역 4번 출구(엘리베이터) 좌우 두 건널목에서《4.15 당일투표》 캠페인을 오후 5:30까지 전개하다가 오후 6시에 귀가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은《헌법납치 NO》 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2:50 집에서 나와 구산역 4번 출구 양쪽 건널목 행인을 대상으로 1인 캠페인을 오후 4시까지 전개하다가, 응암역으로 옮겨가서 4번 출구 건널목 행인을 대상으로《헌법납치 NO》 1인 캠페인을 오후 5시까지 실시하는데 5·60대로 보이는 남자분(2명)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웃으면서 엄지척! 또 한 분은 손뼉을 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5시에 구산역으로 가서 역시 4번 출구 건널목에서 5:30까지 캠페인을 벌이다가 귀가, 6:06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늘은《헌법납치 NO》 패널을 몸에 두르고 11:30 집을 나와 전철편 경복궁 앞" 공명선거지원단미팅"에 참석하여 애국심이 투철하신 공명선거지원단의 남녀 단원들을 만나보니 머리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간밤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장소 감시를 위하여 밤잠을 못 주무신 단원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2시 지나 유경호 선생님과 함께 영천시장 속 "도깨비칼국수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은 다음, 전철을 타고 오후4시경에 구산역에 내려, 4번 출구 좌우 건널목 행인을 대상으로 《4.15총선, 100년을 위한 선택》 패널을 두르고 오후 6:07분까지 1인 캠페인을 전개하다가 귀가했습니다. 캠페인 끝에는 응암동에 사시는 공명선거지원단 김지혜 선생님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4월 12일 일요일

오늘은《4.15총선, 100년을 위한 선택》 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2:30 집에서 나와, 구산역에서 지하철편 응암역으로 이동하여, 4번 출구 건널목에서 오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1인 캠페인을 전개하다가 전철편 구산역으로 이동, 4번 출구 좌우 건널목 행인을 대상으로 1인 캠페인을 오후6시까지 전개하다가 귀가, 오후 6:32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이 든 행인들은 표어 내용을 자세히 읽는 분들이 많았으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오늘은《4.15총선, 100년을 위한 선택!》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3:58 집에서 나와 구산역 3번 출구의 두 건널목을 오가면서《4.15 선거》1인 캠페인을 오후 5시까지 전개하고 오후 5시부터는 길 건너 4번 출구의 좌우 건널목을 오가면서《4.15 선거》1인 캠페인을 오후 6:33까지 전개하다가 자리를 떠나 귀가, 오후 7:18집에 도착했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4.15총선, 100년을 위한 선택!》 패널을 몸에 두르고, 오후 3시에 집에서 나와 구산역 승차, 연신내역에 하차, 지하1층에서 오후 6시까지 3호선과 6호선 승하차, 환승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5·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은 "사전선거관리"에 분통을 터뜨리셨고, 6·70대로 보이는 부인은, 패널을 들여다보더니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위한 선택이지!" 라고 힘주어 말씀 하시고는, "몇 번이야?"라고 의견을 묻기에, "각자 알아서 투표하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신내시장도 한 바퀴 돌면서 패널을 보여준 후, 오후 6시가 넘어 구산역으로 이동, 4번 출구에서 건널목 통행인을 대상으로 1인 캠페인을 전개하다가 현장을 벗어나 오후 7시 39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선영 님 (서초구)

선거를 마치고

학력과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소중한 한 표의 권리가 바르게 행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정선거지원단에 가입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막힌 거짓 소문과 책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그 후의 대선 과정과 뒤이어 들려온 전자개표부정 의혹과 QR코드 문제 등,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공천의 불협화음과 선거 직전까지 이어진 진정한 자유우파의 투사들을 걸러내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에서 그 중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인지 피아 구별이 어렵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천천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통당을 찍어야 하겠지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주위 친지들에게는 비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한 주장을 하고 중공을 물리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새벽당을 권유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

개인적인 여건으로 제한된 시간만 할애하는 자신에 비해, 지원단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다른 단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불안감을 이기며 선거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에 사전선거함이 열리자 치열하던 승부는 거의 뒤집어지고 결과는 사회주의 독재 중국식 전체주의를 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훨씬 크다는 참담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크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인간 본능에 가장 가까운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름과 진실을 말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소위 평등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소심한 ‘소수’ 세력이 되는 것인가?

하루 이틀 진정을 하며,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자기기에 의한 조작과 프로그램조작 의혹, 중국공산당의 개입 등 부정선거의 의혹이 구체화되어 갈수록 이번에 이러한 의혹을 밝히고 이슈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정한 투표가 있을지, 자유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으로 반미를 표명하고 중공으로 기울어진 이 정권을 돕는 우중의 행보는 미국의 대북한 대 중국 전략 수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그 결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큽니다. 다음 대선에서 바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선동되고

세뇌된 많은 대중과 조직적인 선거부정의 문제점을 안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화웨이의 전자 장비에 의존하는 선거 체제에서 자유로운 비밀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올바른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유 시민이 연대하고 유권자 운동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번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사전선거제도를 시정하고 중국의 개입을 밝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다음 대선을 향한 행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러. 김지수 님 (경기도 용인시)

4.15 총선을 위한 공명선거 지원단 활동은 무엇이었나

평범한 자유 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오며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국민의 의무나 잘 이행하며 살아온 내가 언젠가부터 무슨 큰 애국자마냥 나라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아지고 갈수록 되어가는 일들을 보며 절망적인 느낌으로 나라의 안위에 전전긍긍할 때, 여야는 다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공명선거지원단에 등록하고 사전투표일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지역 선관위에 나갔지만, 우리 민간지원단은 사전투표함이 5일 밤이나 보관되어 있는 선관위 빌딩 밖에서만 혹 수상한 사람이 드나드는지 정도를 밤을 새며 교대로 감시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낮에는 각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선관위 건물로 사전투표 봉투를 플라스틱 네모난 바구니에 옮겨오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국민의 뜻과 의사의 결정체를 이렇게 허술히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어이가 없었으며 너무나 큰 충격을 느꼈다. 우체국 택배엔 두 명의 직원만 달랑 와서 손이 모자라 그 귀한 사전투표 바구니를 선관위 건물 현관 입구에 내동댕이치고 먼저 것을 들고 들어가 버리니 내가 나머지를 지키고 있는 등 참 기가 차고 무슨 우리집에 택배 온 것 같은 형국이기도 했다.

그 많은 지역에서 아무나 아무 데서나 선거인 명부도 준비 안 된 채로 누가 투표한 건지 확인도 안 된 채로 투표한 그 투표봉투를, 완전히 뚜껑도 없이 열린, 떡이나 전이나 담아 나르는 바구니에 담아 택배차로 옮겨오니 선거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 사전투표제도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정부를 믿고 따르는 순수한 국민을 속이는 가공할 위헌 제도이며, 관리도 여러 여건상 절대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멍 숭숭 결코 허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이었다. 사전선거는 절대 공명선거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참여한 지역은 화성선관위, 용인선관위, 오산선관위, 세 곳을 5일 낮 밤을 지킨다고 밤 추위에 그 고생을 했는데,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도 마음이 같으니 서로 격려하면서 2인 1조로 3시간 또는 어떤 분은 7시간을 건물 밖 길에서 날밤을 샜지만, 나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다고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곧, 결과는 신께 맡기고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 위기에서는 누구나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함께하지 않는 주위 가까운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했고, 결과가 너무도 참담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 헛수고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또 다른 차원으로 더욱 굳건히 세우는 자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었으며 드러나지 않는 커다란 용트림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루속히 온 국민이 깨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국민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곳곳에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희망찬 나라를 세계가 보란 듯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20, 4월 말

머. 박민자 님 (경기도 일산고양)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며, 그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이 힘들었다.

4/11 토요일,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사전투표율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분산투표를 하겠다는 '의지'와 국민들의 '의지'로 볼 수 있었으며 걱정도 되었지만, 그것이 곧 일산의 국민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고양의 투표율은 50%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는 지난 투표의 반이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을 보면, 본 선거에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투표율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우파의 유투버와 광화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우리의 '희망'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부 록 (1) 대법원 2017수122 대통령선거무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수122 대통령선거무효
원 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2017. 5. 9.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자가 최다 득표자로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선거의 총 투표수는 32,807,908표이고 그중 유효표는 32,672,175표, 무효표는 135,733표이다. 문재인 후보자는 유효표 중 13,423,800표를, 차점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자는 7,852,849표를 득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사전투표함 참관 불허에 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 참관(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상황 참관(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의 송부와 관외 사전투표지가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

는 과정 참관(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 등의 권한이 있지만,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참관할 권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나. 관외 사전투표용지 발급 권한에 관하여

원고는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관리관만이 사전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전제한 다음,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관리관이 아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된 사전투표용지 사용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 또는 관외 사전투표를 묻지 않고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온 선거인에게 자신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교부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외 선거인에게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58조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절취용 일련번호지 없는 사전투표용지 사용에 관하여

원고는 절취용 일련번호지가 없는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실제 발급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투표의 비밀침해에 관하여

원고는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하여 제3자가 특정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를 관리·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미날인에 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사전투표용지 모형 미공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전투표용지 모형을 별도로 공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와 투표용지는 일련번호의 인쇄방식 이외에는 동일한 형태이고, 피고는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면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됨'이라고 부기하였으므로, 결국 공직선거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시행규칙 미제정에 대하여

원고는, ① 개표소별 보고용 컴퓨터에 의한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전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전산자료를 취합·집계·발표하고, ②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기타 선거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따라 이에 관한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선거사무를 집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개표결과 집계와 통합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목적의 전산조직을 구축·사용할 것을 이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제106조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전산조직이 차질 없이 실시된 이상, 피고에게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개표참관인 인원수 제한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도 개표참관인을 일정 수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 회수에 관하여

선거가 종료된 다음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비품을 선거종료 후 수거·보관하는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투표지분류기 결과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사용조선을 갖추지 못한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투표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이상과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김 재 형

대법관 민유숙 민 유 숙

부 록 (2)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개표참관인 신고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참관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신고인
- ○ ○ 당 ㊞
- 대 표 자 ○ ○ ○ ㊞
- 후 보 자 ○ ○ ○ ㊞
- 선 거 사 무 장 ○ ○ ○ ㊞
-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
3.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2. 참관인 인적사항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투표참관인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비고"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사전투표참관인은 신고시 "참관일자"란에 참관인별로 참관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 록 (3) 양천구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백서 (차대욱 님, 양천구)

1. 감시기간 : 2020. 4. 10.(금) 18시~4.15(수) 18시 (총 120시간)
※ (활동기간: 4. 1~5. 1 (1개월))

2. 감시활동지역 :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해누리타운 빌딩 6층)

3. 감시활동참여자 : 차대욱 공명선거지원단 양천지역 총감독 외 18명
- 양천지역 자유시민연대 회원 12명 (등록회원 21명)
- 외부참여자 7명

4. 활동의 내용/방법: 사전투표함 감시/2인1조, 6시간씩

5. 활동의 성과 : 1) 훼손된 봉인지 발견/제보 건 (신의한수 유튜브)
※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2) 양천구 선관위의 공문서 변조 건 (사전투표함 열람신청서)
※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3) 중앙선관위의 훼손 봉인지건에 대한 거짓 해명
(성재준티비 유튜브)
※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4)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4/27)
- 사전선거투표 참관인 확인요청
- 훼손 봉인지관련 현장 CCTV 동영상
- 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봉인/해제/재봉인 CCTV 동영상
- 훼손 봉인지 교체 참관인의 확인서

6. 부정선거 의혹 사례

1) 투표관리관의 요청에 따른 봉인지 남발: 훼손/교체를 이유로 소정의 봉인지(2~4매) 보다 많은 최대 10매의 서명 봉인지 확보
- 훼손/교체 및 기계/장비에 부착한다는 이유
- 보통 투표참관인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인지 서명은 2~3명이 돌아가면서 서명함

2) 투표 1일차 및 2일차에도 봉인지 교체:
습득한 훼손 봉인지 (2일차)는 1매 였으나 필요이상(3~4매)의 봉인지 서명요구.
(1일차는 “양천구 선관위”에서 교체가 이루어졌고 2일차는 “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짐)

3) 선관위의 극도의 경계 및 비협조/사무실 출입통제
- 선관위가 위치한 빌딩(구청별관)의 입, 퇴실 규칙으로 야간에는 건물 외부에서 감시함으로 무방비
(야간에 수시로 선관위 직원 출입/투표함 보관장소 소등치 않음)
- 사전투표함 열람신청 시, 사진촬영 금지

7. 문제점 및 향후 개선요구사항

1) 참관인 선정의 문제점:
대체적으로 부녀회/노인회 등에서 형식적인 참관으로 일관 (투표관리관의 요구에 적법여부 고민없이 무조건 순응함).
※ 선정시, 주민쎈타와 해당 구의원의 추천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원하여 참관인 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음.

2) 당 차원에서 참관인의 중요성 간과하여 기본교육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봉인지 촬영 미실시로 개표시 봉인지의 이상여부 확인 불가능함.
※ 사전투표 전, 양천구 갑/을 지구당을 방문하여 선거사무장에게 사진촬영을 신신당부 하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3) 특히, 사전투표의 전과정 (관외사전투표함 봉인/사전투표 보관소 출입문봉인/제거)을 감시하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추천 지구당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무언가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인상을 받음,
(아직도 이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음)

4) 미통당의 사전투표 폐해 심각성 인지 부조화:
중앙당/서울시당/양천지구당 직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경악.

8. 건의사항

1) 봉인지 해체는 오직 개표장소에서만 실시 의무화
2) 참관인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3) 유권자의 권리 확보 (부정선거 오해 사전방지/투명, 공정한 선거목적)

- 사진촬영 허용/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신고한 유권자의 감시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협조 의무화

4) 우파 언론사 (예: 팬엔마이크)의 임시/특별 취재 기자증 확보

5) 공명선거지원단 완장 필요

9. 결론

"사전투표 폐지"

※ 첨부 1: 훼손된 봉인지 발견 및 제보건

※ 첨부 2: 양천구 선관위 공문서 변조건

※ 첨부 3: 중앙선관위의 훼손 봉인지 건에 대한 거짓 해명

※첨부 1(훼손된 봉인지 발견 및 제보건)

1. 발견일시 : 2020.4.12.(일)오전 7시경
2. 발견장소 : 양천구 선관위가 있는
   양천 해누리타운 빌딩(구청별관)정문앞
3. 발견자 : 양천지역 공명선거지원단 회원
4. 발견시 봉인지 상태 : 구겨진 상태
5. 봉인지 출처 : 양천구 신정4동 2일차 사전투표함(양천을 지역구)
6. 봉인지 서명자(참관인)
   1)투표관리관 : 김도영(신정4동 행정6급)
   (1인)
   2)정당추천 참관인 : 원정순/이명식 (미통당 참관인)
   (4인) 서규민 (더불당 참관인)
   문성혜 (국가혁명배당금당 참관인)
7. 훼손/방치된 경위(선관위의 해명진술)

   1)해당 양천구 선관위의 답변
   -처음 답변은 "투표함에 붙혀졌던 봉인지가 아니고 무슨 기구에 붙혀졌던 봉인지가 떨어져 생긴 일이다"
   (미통당 양천을지구 선거사무장이 양천선관위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두번째 답변은 "훼손 봉인지가 투표관리관(김도영)의 신발에 부착된 채 양천선관위에 와서 일을 마치고 귀가도중 그 봉인지가 정문앞에서 떨어졌으며 신발에 부착된 CCTV 동영상이 있다"
   ※(확인위해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신청중임)
   *(이 답변은 현재 보관중인 봉인지의 접착제가 있는 면과 서명부분이 있는 면의 훼손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
   왜냐하면 신발에 부착이 될려면 신발바닥에 접착제가 있는 부분에 붙어있고 서명된 부분이 바닥에 긁혀있든 지 더럽혀져 있어야 하는데 서명된 부분이 깨끗한 상태임.)

(5)

2)중앙선관위의 답변

-투표함 정리하는 과정에서 봉인지의 일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투표마감후 투표참관인 전원(5명)의 동의하에 봉인지 교체함

-훼손된 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처리했으나 그중 1개가 유실됨

-정당추천 투표참관인 모두가 투표함이송 및 보관과정까지 참여함

8. 제보 : 신의한수 유투브에서 보도

※첨부 2 (양천구 선관위의 공문서 변조건)

1.변조 공문 : 관내 사전투표함 열람신청서

2.변조 내용 : 신청서 양식의 일부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여 신청을 방해함

-신청서 하단의 (주):신청가능한 범위를 규정

-(주) 1,2,3 중 3(단체 및 개인의 열람)을 삭제하여 열람신청을 고의로 훼방하고 기만함.

-항의하자, 사무실의 PC에서 (주)3을 입력함.

※첨부 3 (중앙선관위의 훼손 봉인지건에 대한 거짓 해명)-성제준TV유투브에 소개-

1. "사전투표자수(3,994명)가 많아 투표진행중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기 위하여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착되었던 봉인지의 일부분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투표마감후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봉인지를 교체함."

【 거짓 】:습득한 봉인지는 제2일차의 봉인지(신정4동사전투표소에서 교체)로써 1매이며, 교체된 봉인지의 서명은 5명의 참관인중 3명만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자 본 선거 투,개표날(4/15)개표장소에서 투표참관인 전원이 아닌 일부 참관인들에게 확인서를 받음.
더구나 제1일차에도 봉인지교체가 투표소가 아닌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 바,
투표참관인 전원이 아닌 투표함 호송시 동행한 2명의 참관인만 교체를 목도함.

2. "훼손된 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처리하였으나 그중 한 장이 유실되어 양천구 선관위청사 인근 바닥에서 발견됨.
(많은 봉인지 교체가 있었음을 암시)

3. "투표함 봉함,봉인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음.

【 거짓 】:투표참관인은 5명이나 이송 및 보관에는 2명만 동행하므로 모두 참여했다는 해명은 거짓임.

(7)

공명선거지원단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

(2020. 1. 2. ~ 2020. 4. 15)

자유시민본부 서울 서북연대

발행일 2020년 5월 16일

발행인 김창조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 회장)

편집인 박동숙 (자유시민본부 서북연대 간사)

표지디자인 진수현